

李文玉 前감사관에  
大法, 파면결소 확정  
대법원 특별3부(주심  
池昌權)가 11일 재  
판의 파면무효 부동산 보  
유권판결 기판한 감사원  
자료를 공개해 파면무효  
감사원 감사관李文玉씨  
(56)가 법원판결을 취소  
할수없어 인정하자 『李  
씨의 파면이 부당하다』고  
판다(서울지법)판결을 해  
결했다.李文玉씨에 관해  
재판부는 파면무효판결  
이므로 이 법원판결은  
법원판결이므로 파면무효  
이러한 사실은 법원판  
결에 있다.

한정 96.10.12

이문옥 前감사관  
大法, 파면무효 판결

대법원 특별3부(주심 池昌權대  
법관)는 11일 감사결과를 폭로, 공  
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파  
면당한 이문옥(李文玉·56)전감사  
관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  
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감사원측 상  
고를 기각, 파면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李씨가 파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공개된 보고서의  
내용과 영향, 법령위반 정도등을 종  
합해 볼때 파면이란 징계처분은 감  
사관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  
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96  
중앙 10.12

李文玉씨 파면무효  
大法 원심확정

대법원 특별3부(주심  
池昌權)가 11일  
재판의 파면무효  
부동산 보유권  
판결을 기판한  
감사원 자료를  
공개해 파면무  
효판결을 확정  
했다.李文玉씨  
에 관해 재판부  
는 파면무효판  
결이므로 이 법  
원판결은 법원  
판결이므로 파  
면무효이러한  
사실은 법원판  
결에 있다.

한정 96.10.12

한겨레  
2022

자료를 공개한이후 재판  
부의 인정은 파면무효판  
결을 기판한 파면무효  
부동산 보유권판결을  
판다(서울지법)판결을  
해결했다.李文玉씨에  
관해 재판부는 파면무효  
판결이므로 이 법원판  
결은 법원판결이므로  
파면무효이러한 사실  
은 법원판결에 있다.

李文玉씨 파면결소 확정

대법원 특별3부(주심  
池昌權)가 11일 재  
판의 파면무효 부동산 보  
유권판결 기판한 감사원  
자료를 공개해 파면무효  
감사원 감사관李文玉씨  
(56)가 법원판결을 취소  
할수없어 인정하자 『李  
씨의 파면이 부당하다』고  
판다(서울지법)판결을 해  
결했다.李文玉씨에 관해  
재판부는 파면무효판결  
이므로 이 법원판결은  
법원판결이므로 파면무효  
이러한 사실은 법원판  
결에 있다.

이문옥 前감사관  
大法, 파면무효 판결  
대법원 특별3부(주심  
池昌權)는 11일 감사결과를 폭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파  
면당한 이문옥(李文玉·56)전감사  
관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  
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감사원측 상  
고를 기각, 파면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李씨가 파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공개된 보고서의  
내용과 영향, 법령위반 정도등을 종  
합해 볼때 파면이란 징계처분은 감  
사관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  
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96.5.11

이문옥씨 무죄 확정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127  
조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누설할 수 없도록 한 직무상  
비밀은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  
됐거나 비밀로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치·군사·외교·경제·사  
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것이니 이 조항에  
서 말하는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감사보고서 내용은 공  
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  
다" 밝혔다.

조선일보 96.5.11

李文玉씨 파면결소 확정  
대법원 특별3부(주심  
池昌權)가 11일 재  
판의 파면무효 부동산 보  
유권판결 기판한 감사원  
자료를 공개해 파면무효  
감사원 감사관李文玉씨  
(56)가 법원판결을 취소  
할수없어 인정하자 『李  
씨의 파면이 부당하다』고  
판다(서울지법)판결을 해  
결했다.李文玉씨에 관해  
재판부는 파면무효판결  
이므로 이 법원판결은  
법원판결이므로 파면무효  
이러한 사실은 법원판  
결에 있다.

이문옥씨 무죄 확정판결

감사원 복직길 열려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폭로해 기소됐던 이문옥(56) 전  
감사관이 6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  
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0일 이 전감  
사관의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  
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내린 원  
심을 확정했다. 94년 파면처분 무  
효 확인소송에서도 이간 바 있는  
이 전 감사관은 이번 무죄 확정  
에 따라 복직이 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127  
조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누설할 수 없도록 한 직무상  
비밀은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  
됐거나 비밀로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치·군사·외교·경제·사  
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것이니 이 조항에  
서 말하는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감사보고서 내용은 공  
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  
다" 밝혔다.

한겨레  
96.5.11

한겨레 1996. 10. 12.

# 이문옥씨 파면무효 확정

## 대법 "비업무용 부동산자료 비밀보호가치 없어" 판결

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1일 재벌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 결과를 <한겨레신문>에 폭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이문옥(56) 전 감사원 감사관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감사원쪽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이씨가 공개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한 자료는 공공 토론이나 국민적 감시의 측면에서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파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공개된 보고서의 내용과 영향, 법령 위반의 정도를 종합해볼

때 파면이란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제정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90년 5월 <한겨레신문>을 통해 '감사원 감사에서 23개 재벌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비율이 43%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에 휘말린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했다가 파면당하자 91년 7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까지 됐다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임범 기자

한겨레 96.10.12

### 국민투표법 제정과정 이문옥

李文玉씨

###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과정

### 9월간 월점이 전월점 가점의 절반

이문옥씨는 1996년 10월 12일 <한겨레신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23개 재벌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비율이 43%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에 휘말린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했다가 파면당하자 91년 7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까지 됐다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문옥씨는 1996년 10월 12일 <한겨레신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23개 재벌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비율이 43%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에 휘말린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했다가 파면당하자 91년 7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까지 됐다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문옥씨는 1996년 10월 12일 <한겨레신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23개 재벌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비율이 43%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에 휘말린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했다가 파면당하자 91년 7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까지 됐다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李文玉씨 국민투표수 확정

대법원 96.10.12. 9월간 월점이 전월점 가점의 절반

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1일 재벌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 결과를 <한겨레신문>에 폭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이문옥(56) 전 감사원 감사관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감사원쪽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이씨가 공개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한 자료는 공공 토론이나 국민적 감시의 측면에서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파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공개된 보고서의 내용과 영향, 법령 위반의 정도를 종합해볼

동아 96.10.12

파면처분취소확정판결을 받고

저는 공직자로서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다가 구속기소되고, 파면당했습니다. 그로부터 만 6년이 되던 지난 1996년 5월 10일 대법원으로 부터 구속기소부분에 대하여 무죄확정판결을 받았고, 또다시 그로부터 5개월을 지낸 1996년 10월 11일에 파면처분취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저의 당시행위에 대하여 그 대강을 말씀드림으로써 사법부판결에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겨냥하여 재벌그룹 계열 법인들이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재벌들은 올림픽이 끝나면 부동산 값이 오를 것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그 재벌들의 예측은 적중하여 올림픽행사가 끝나자 부동산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동산 값이 오르니 전세값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오르는 전세값을 마련하지 못한 어떤 전세입자는 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부동산 투기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달이 멀다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가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감사원은 부동산투기가 제도적인 결함 때문인지, 아니면 제도의 운영에 잘못에 기인한 것인지를 밝혀내어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검토결과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 대다수 재벌그룹의 계열법인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그 해의 감사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따른 과세실태조사'를 감사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세무사로서 세무업무에 밝은 부감사관 1명을 감사전담자로 지정하여 법률적인 검토와 두번에 걸친 예비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38개 가운데 사재벌의 법인도 포함되어 있음을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저를 감사반장으로 한 6명의 감사자가 그 감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는 재벌그룹의 계열 법인이 추가되는 38개 법인들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따른 과세실태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38개 법인 가운데 23개 법인을 감사할 때 감사원의 고위층의 지시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재벌그룹의 부동산 투기실태가 노출되기 시작하자 유수한 사재벌이 정권을 상대로 '감사중단을 위한 로비를 한 것입니다.' 그 로비의 효과는 즉시 발휘되었습니다. 국내 유수한 사재벌의 유명한 로비스트 이모씨가 다각적인 로비를 한 결과였습니다. 노태우정권의 정경유착의 한 단면이 명백히 밝혀진 것입니다. 재벌이 정권과

결탁하여 정부의 중요한 기능인 감사원의 감사기능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노태우씨와 국내 유수한 재벌회장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노태우씨가 재벌의 수백억원의 돈을 그 로비스트 이모씨를 통하여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노태우씨는 1989년 감사당시 그로부터 한창 돈을 받고 있었음이 인정됩니다. 이런 연유로 노태우정권은 당시 저의 감사를 중단시키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원이 정권과 재벌의 결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불법과 부정을 묵인한다면 공무원의 주인인 국민에게 한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이에 대하여는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인함으로써 받는 국민들에 대한 죄책감과 이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노태우정권으로부터 당하는 재벌을 비교할 때 고통의 크기는 비유할 수 없었으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후자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구속되고, 파면되더라도 반드시 사법부에 의하여 바로 잡히든가, 아니면 우리의 역사가 이를 바로 잡아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저는 당시 감사보고서에 「사무총장의 지시」로 감사결과를 감사자료로 하게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였고, 1990년 5월 11일 한겨레신문을 통하여 「재벌의 로비로 감사원 감사가 중단되었다.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즉 감사원의 감사가 재벌들의 로비에 의해 중단되고 있다는 정경유착의 한 단면과, 재벌그룹 계열법인 등 23개 법인에 대한 감사결과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비율이 43.3%로서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걱정했던 대로 저는 구속기소되고, 파면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오늘 저의 판단이 옳았음이 사법부에 의하여 조금은 바로 잡히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내용을 깊숙히 살펴보면 판결주문은 납득이 가지만 판결문의 사실인정에서는 진실과 거리감이 있음을 느낍니다. 사법부도 진실을 밝히는 데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으면서도 사법부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고 예방하는데 힘쓰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 10. 11.

이 문 옥

세제일보 96-10-13

# 감사원李文玉씨 복직 놓고 골머리

감사원의李文玉(56)씨를 복직시키지 않을 방법을 찾으려 하는 분위기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파면이 지나치다는 것이 지경계사유가 없다는 판결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해도 복직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금을 받게 될 뿐이다.

대법판결이李文玉(56)씨를 복직시키지 않을 방법을 찾으려 하는 분위기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파면이 지나치다는 것이 지경계사유가 없다는 판결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해도 복직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금을 받게 될 뿐이다.

## 李文玉씨 復職 원천 차단 방안 검토

대법판결이李文玉(56)씨를 복직시키지 않을 방법을 찾으려 하는 분위기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파면이 지나치다는 것이 지경계사유가 없다는 판결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해도 복직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금을 받게 될 뿐이다.

도사提報한영 (709)4200113

## 감사원「李文玉 복직」떨떠름

尹正國기자

그러나 감사원의 내부기류는 다르다. 오히려李文玉씨를 복직시키지 않을 방법을 찾으려 하는 분위기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파면이 지나치다는 것이 지경계사유가 없다는 판결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해도 복직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금을 받게 될 뿐이다.

동아 96.10.14

## 李文玉씨 파면취소 확정

감사원 "복직 안시키고 해임 결정" (96)10.12

대법판결이李文玉(56)씨를 복직시키지 않을 방법을 찾으려 하는 분위기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파면이 지나치다는 것이 지경계사유가 없다는 판결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해도 복직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금을 받게 될 뿐이다.

전남일보 96 10.12

대법판결이李文玉(56)씨를 복직시키지 않을 방법을 찾으려 하는 분위기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파면이 지나치다는 것이 지경계사유가 없다는 판결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해도 복직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금을 받게 될 뿐이다.

1996년 10월 17일 목

재법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결과를 양심선언으로 폭로 지난 91년 파면당했던李文玉 前감사관 복직문제를 놓고 감사원이 속앓이를 겪고 있다.

후씨는 당시 공무원 비밀누설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5월 대법원이 후씨에 대해 무죄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와 최근 후씨는 감사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도 대법원으로 부터 파면무효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감사원은 「판결문을 송달받은대로 내용을 면밀히 분석, 복직여부를 결정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아무런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공식입장만 띄웠지만 이 문제의 거론 자체를 삼가고 있다. 감사원의 상당수 판

### 감사원 「이문웅」 밀레마로

수입이

계자들은 양심선언으로 조직을 회오리에 빠뜨렸던 후씨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다.

후씨가 양심선언의 예도 명멸불복종등 조직에 누를 끼친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사

‘양심선언’감정 안좋아  
자진사퇴면 2억 받아  
복직 원할땐 거부못해  
‘책상하나 놓아줄수도’

직했으면 하는 희망이 많은 것이다. 이 경우 후씨는 그간 밀린 봉급 및 보너스 퇴직금등 2억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가 명예회복을 내세워 강한 복직의사를 표명해 온다면 감사원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포퓰러한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결상 파면처분이 과했다면 한 단계 가벼운 해임처분을 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으나 판결은 사실상 「배제징계」가 과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책임여시 무리라는 지적이다.

정치·감봉·견회등 다른 경징계는 복직후 후씨의 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어렵다.

후씨는 지난 14,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경력이 있으나 당시 공무원 신분은 아니어서 이같은 정치활동을 문제삼을 수도 없는 상태. 따라서 감사원에서는 후씨를 파면당시 직급인 서기관으로 복직시키되 감사 일선에서 「책상 하나 더 놓아주는」 자리에 앉힐 것이라는 추측도 많다.

146 전남일보 - 96.10.17



李文玉씨

공무원연금법 제 20조 제 2항에 따라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공무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과 연금에 대한 처분을 받는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 20조 제 2항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에 대한 처분을 받는다.

공무원연금법 제 20조 제 2항에 따라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공무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과 연금에 대한 처분을 받는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 20조 제 2항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에 대한 처분을 받는다.

## 李文玉씨 복직 감사원 "속았어"

### 전직의미 유엔, 하긴 해야 하기에...

공무원연금법 제 20조 제 2항에 따라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공무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과 연금에 대한 처분을 받는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 20조 제 2항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에 대한 처분을 받는다.

공무원연금법 제 20조 제 2항에 따라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공무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과 연금에 대한 처분을 받는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 20조 제 2항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에 대한 처분을 받는다.

공무원연금법 제 20조 제 2항에 따라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공무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과 연금에 대한 처분을 받는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 20조 제 2항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에 대한 처분을 받는다.

## 감사원李文玉복직 "고민"

"하긴 해야는데..." 내부 거부감 걸림돌  
"스스로 사직 않으면 開職 말길 수밖에"

감사원이李文玉前감사관의 복직 처리방안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지난 90년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결과를 언론에 폭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주씨가 최근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기 때문에 감사원이 그의 복직을 거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떤 자리에 복직시킬 것인가. 李時調감사원장은 "이런 법원으로부터 정확한 판결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감사원이 가장 바라는 방식은 복직과 동시에 의원면직 처리하는 것이다. 출근을 시키지 않은 채 지금까지 밀린 월급과 상여금 및 퇴직금 약 2억원을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명예회복에 비중을 두고 소송에 임했던 주씨가 스스로 사퇴를 내는 이 방식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럴 경우 파면당시 직급인 서기관에 재임용해 자리를 마련해 줄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하지만 대다수 간부들은 그에게 다시 감사관 자리를 내주거나 주요 행정업무를 맡기는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밖에서 감사원을 그토록 비판했던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직원도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한직인 감사교육원에 배치해 일을 맡기지 않는 방식이다. <成龍현>

## 12.이문옥 감사관 감사원 복직

국민일보 96.10.16



### 6년만의 출근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폭로해 파면당했던 이문옥 감사관(왼쪽)이 6년 만에 감사원 복직 통보를 받고 4일 오후 감사원에 출근해 동료 직원들과 반갑게 악수를 하고 있다. ▶ 관련기사 2면 이출근 기자



### 6년만에 복직 이문옥 감사관

## “비리는 저질러지기전에 막는것이 최선”

“감사원은 잘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그만한 독도 없습니다.” 지난 달 11일 대법원에서 파면처분 취소 확정판결을 받고 4일 마침내 복직한 이문옥 감사관은 잘라 말했다.

평투기 문제로 사회전체가 몸살을 앓던 지난 90년 그는 재벌들의 비업무용 토지 소유가 그 주범이었음을 알고 감사에 손을 댔다. 감사가 한창 무르익고 있던 어느날 상관으

로부터 “그만 (감사를) 뉘어라”는 짤막한 지시를 받았다. 당시 청와대에 비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려지었던 이 아무개씨의 로비가 들어온 뒤였다. 평생 정부의 ‘늑’을 받으면서 상명하복의 공직원리를 익혔던 그는 그 당시만 앙심에 비추어 도저히 상관의 지시는 따를 수 없었다.

그는 최종 감사조치를 적는 담당

의견편에 커다랗게 “사무총장 지시”라는 항명성 글귀를 남긴 채 감사를 중단했고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제는 그로부터 며칠 뒤 공직자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감사원이 총체적 부패시정기후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권력의 침해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국회 아래로 들어가야 합

니다.” 그는 감사원이 달라진다고 해서 사회의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한다. 임격한 감사나 처벌로 공직자 비리를 다스리는 것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비리가 자질러지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부패문제에 관한 한 처벌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자에 게 엉뚱한 약만 먹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정권의 의지 문제입니다.”

합석진 기자

협찬 **KIA** 기아자동차

## 제2부. 이문옥의 사회활동

1. 사회단체활동
2. 92년/95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
3. 양심선언자 보호를 위한 법제정 노력
4. 사회활동 주요자료





## 경실련 경제부정고발센터 이문옥 대표

지난해 5월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원 자료를 폭로한 이후 정부와 관련된 각종 특혜의혹사건들을 파헤쳐왔던 전감사원 감사관 이문옥 씨(51)가 이번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경제부정고발센터 대표를 맡아 정경유착 의혹사건들을 추적·감시하고 있어 정부와 재계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행정부의 '부정의 소지가 있는 부분' 등 '일거수 일투족'을 꿰뚫고 있는 이문옥 전감사관이 지난 6월1일부터 경실련 경제부정고발센터의 대표로 취임한 것. 이로써 지난해 6월9일 정식 출범해, 황인철 변호사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던 경제부정고발센터는 이문옥 전감사관과 함께 출범 2기를 맞게 됐다.

대표를 맡은 이후 이문옥씨가 다루고 있는 주요현안들은 동방·선경제약의 은행일 엑스(추출물) 특허공방문제를 비롯 (주)범양건설의 '합동공유수면매립' 문제, 한국화약그룹의 '소래포구매립' 문제 등 1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이문옥 전감사관은 이들 문제들이 경제부정고발센터의 추적 대상인 ▲국가예산의 공정한 집행 여부 ▲정경유착에 의한 비리의혹 ▲특정집단에 혜택을 주는 정부정책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전감사관은 사도 광역의회 선거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총 57건에 이르는 경실련 사무실에서 고발전화를 받으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그를 만나 경제부정고발센터에서의 활동 및 일상생활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경제부정고발센터의 책임자역을 맡았는데.  
▲늘 부조리를 없애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경제부정의 실상을 파악, 해결하기 위해 책임자직을 수락했다.

국가예산의 엄정한 집행여부, 정경유착에 의한 비리, 특정집단에 혜택을 주는 정부정책 등을 감사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제대로 감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관련 공무원, 이해당

사자,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진실을 규명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고발하는 방법을 택하겠다. 시민운동을 통해 시

지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에는 너무 벅찬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정부와 사법부



지난 6월1일 경실련의 경제부정고발센터 대표로 취임한 이문옥 전감사원 감사관.

## 제보받아 정부기관 비리의혹 추적·고발 동방·선경 은행일공방 등 10여건 추진중

### 시민운동 통해 압력행사도... 「광역」권유 사양

정을 촉구하는 것도 우리가 추구하는 한가지 방법이다.

—고발이 많이 들어오는가.  
▲전화제보를 포함해 꽤 많은 편이다. 며칠전 들어온 중요한 고발사제로 감정원 노조측의 '토지지가고시에 대한 문제점제기'가 있었다. 이 문제는 경실련내 토지분과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점을 모색하겠다.

—대표를 맡은지 20여 일이 지났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고발센터'의 주요 고발 대상인 정부기관의 잘못이나 부정 문제 이외에 시민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대기업·중소기업의 갈등과 관련된 고발도 꽤 되는 편이다. '고발센터'의 규모가 크

를 불신하고 '고발센터'를 '의지처'로 삼으려는 심정은 이해가 간다. 이런 문제들은 가급적 방향체제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정집단에 혜택을 주는 정부정책에 구체적 사례가 있다면.  
▲군인공제회 등 단체들에게 제도상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 수영비행장은 비행장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상태다. 이땅에서 나온 임대료 수입은 국가로 귀속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약 25억원 정도를 군인공제회 수익으로 잡고 있다.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아직 한차례의 현지조사밖에 하지 못했지만 한국화약의 소래포구 매립문제가 대표적인 정경유착의혹 사례다. 한국화약측은 5공시절 개발이익을 1백% 환수토록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이 시행되기 하루전에 1백34만평의 매립허가를 받았다. 이것은 1조3천~1조4천억원에 달하는 특혜의혹사건이다. 피해보상은 당연하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일상활동에 대해 소개해 달라.

▲'고발센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학교나 시민·종교단체의 요청으로 주 평균 2회정도 강연에 나가고 있다. 강경대군 장례행진에도 참가, 최루탄 세례를 받기도 했다.

—수십년 동안의 '생활패턴'이 바뀌어 불편한 점은 없는가.  
▲얼굴이 많이 알려진 편이어서 불편할 때도 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나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기쁘다.

—일부 시민단체·정당에서 정치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의회선거의 시민단체 후보자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나오는 상의가 없었다. 정당쪽 요청도 있었지만 거절했다. 내가 정치에 뜻이 있다면 동창회나 여러회합에 자주 얼굴을 내밀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동창회에도 나가 지 않고 있다.

—'감사원 자료 폭로사건'의 재판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재판은 형사·행정사건 두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다. 형사사건은 기일 지정까지 받았었는데 검사측의 요구로 연기됐다. 문제가 점차 확산되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 행정사건은 총무처 소청심사청구가 5월24일자로 기각됐다.

—향후 '고발센터'를 확대 재편할 계획은 없는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지금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정부의 갖가지 비리형태들을 차분히 밝혀내고, '고발내용'들을 충실히 검토·해결하는 데 주력하겠



## 끝내 쫓겨난李文玉 "호루라기 계속 불겠다"

### 경실련에 가입... 공무원의 지자제 선거개입 감시 맡아

李文玉씨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잃었다. 지난 15일 5급 이상 공무원의 발령권자인 대통령의 명의로 파면통지서가 발급됨으로써 이씨에 대한 정부의 징계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한다"고 밝힌 정부는 중징계 사유로 "감사활동으로 얻은 자료는 직무상 비밀인데도 이를 유출했으며 보석 이후에도 대중집회에 참석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지난해 5월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를 언론에 제보한 행위는 직무상 기밀누설에 해당되며,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이씨는 자신의 죄과를 뉘우치지도 반성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파면통지는 지난 12월27일 그의 파면을 결정한 제2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정문화 총무처 차관)의 의결 내용에 따른 후속절차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씨는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놓고 있다. 공무원징계령 제9조1항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장 9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끝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전 이감사관에게 파면을 내린 12월27일의 의결은 감사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5월26일부터 무려 2백14일이 경과된 후 이뤄진 것이므로 법령에 규정된 의결기한을 넘긴 것이다. 이씨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과 회의운영 방식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지난 15일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한 이문옥 전 감사관과 파면을 통보한 '발령통지서'.

등은 각급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수백개의 보통 징계위원회(6급 이하 공무원 징계기관)의 선례와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처사'

라며 제2중앙징계위원장 앞으로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이 질의서는 의결기한을 넘긴 이유와 법적 근거를 밝혀줄 것과 "공무원의 법령위반사항을 징계의결하는 징계위원회가 공무원징계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본건 처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는 점을 추궁하고 있다.

### "파면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27년8개월의 공무원 생활을 '파면'으로 끝맺게 된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결과로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만일 상사의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순응했다면 무사히 정년까지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었다"

고 말했다. 20년 동안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다른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위법을 저질렀을 때 이를 징계·처벌해온 자신이 "그와 똑같은 짓을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한해 동안 그는 큰 시련과 영예를 누렸다. 2개월에 걸친 수감생활과 20년 동안 몸담아온 직장에서 축출되어 생계가 막연해지는 불운을 당했지만, 일반시민과 사회단체로부터 양심적인 공무원의 표상으로 표창을 받았다. 자신이 희생될 각오로 소속부처의 비리를 폭로한 '휘슬 블로어(whistle-blower)'로서 그의 고발정신이 높이 평가된 것이다. 그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사저널》 《동아일보》 《무등일보》 기자회견 등에서 일제히 90년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에 대한 여론의 판결은 지극히 긍정적이다. 지금도 그의 집에는 격려 전화와 편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는 앞으로 '진실은 결코 외롭지 않다'는 믿음을 확인케 해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이씨는 사회 전반에 정의를 구현하고 바람직한 직업공무원 제도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할 생각이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얼굴만 가지 고도 당선될 것"이라는 농담을 들을 만큼 얼굴이 '팔러' 행동거지가 부자유스럽다는 그는 정치판에 뛰어들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그는 "곧 실시될 예정인 지방자치 관련 선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부정과 비리는 부정·불법 선거에서부터 싹트기 때문에 공정선거는 민주화의 초석이다.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파면통지서를 받아 공무원의 신분에서 벗어난 다음날 그는 경실련에 가입했다. 그는 앞으로 경실련의 '공명선거추진위원회'에서 일할 계획이다. 오랜 감사관 생활로 누구보다 공직자 사회의 내막에 밝은 그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부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벌써부터 타락의 조짐이 엿보이는 지방의회선거에서 이문옥 전 감사관의 호루라기가 언제 어떻게 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 政經유착등權力부패우선추방을

## 15개 시민단체 토론회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하여 15개 시민단체가 15일 서울에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대한경제' '한겨레' '민중' '노동' '사회' '문화' '여성' '학생' '노년' '장애인' '환경' '평화' 등 15개 시민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부정부패의 근절'을 주제로 '부정부패의 현황' '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의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주제로 '부정부패의 현황' '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의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주제로 '부정부패의 현황' '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의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주제로 '부정부패의 현황' '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의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 정치자금 공개·공직자非理 고발센터 필요 監査院 독립 靑瓦臺도 監査할수 있게 해야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하여 15개 시민단체가 15일 서울에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대한경제' '한겨레' '민중' '노동' '사회' '문화' '여성' '학생' '노년' '장애인' '환경' '평화' 등 15개 시민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부정부패의 근절'을 주제로 '부정부패의 현황' '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의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주제로 '부정부패의 현황' '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의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주제로 '부정부패의 현황' '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의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주제로 '부정부패의 현황' '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의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방안

## 組織 대대적 정비 기능강화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하여 15개 시민단체가 15일 서울에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대한경제' '한겨레' '민중' '노동' '사회' '문화' '여성' '학생' '노년' '장애인' '환경' '평화' 등 15개 시민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주제로 '부정부패의 현황' '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의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주제로 '부정부패의 현황' '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의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주제로 '부정부패의 현황' '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의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주제로 '부정부패의 현황' '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의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 청년학생講座 ын동가 등 양성 노년 ын정비 平양법 幹事 1인 1인

### 李文의 ын정비 經濟부정 干預 干預 干預

이날 토론회에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주제로 '부정부패의 현황' '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의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주제로 '부정부패의 현황' '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의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주제로 '부정부패의 현황' '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의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주제로 '부정부패의 현황' '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의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문옥 감사관님께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방자치 선거와 관련하여 이문옥 감사관님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전합니다.

지난 1월 12일 발족된 【공명선거실천 기독교 대책위원회】(명예대표:한경직 목사, 공동대표:이한빈 박사·김준근 목사·김지길 목사)의 대책위에서는 젊은 기독교인들의 참여를 위해 「청년분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가오는 2월 7일 교회 대학부 및 선교단체 임원 및 소그룹 인도자들을 초청하여 그간의 활동을 소개하고 참여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학·청년대표자들의 폭넓은 공감대와 공명선거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한 발제를 약 30분간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현재 보수교회 내의 젊은이들간에 지자체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만큼, 감사관님이 평소 현장에서 느끼신 공무원들의 비리와 선거 자체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해 폭넓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담회 프로그램과 세부사항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7일의 강의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1년 2월 4일

실행위원 이만열 교수, 손봉호 교수 외  
청년분과위원장 박성남 전도사 드림

공명선거 캠페인을 위한

대학·청년 지도자 및 대표자 간담회 세부계획

**장 소 :** 사랑의교회 소망관(영동플라자) 404호 (☎ 553-7706~7)  
지하철 2호선 강남역 하차, 제일생명 뒷편  
버스노선 : 17·28·36·66·78-2·83-1·289·289-2

**시 간 :** 1991년 2월 7일 (木) 오후 7:30 ~ 9:30

**목 표 :** 기초조직 구성  
공명선거 취지소개 및 홍보요청  
기본교육

**설 교 :** 이한빈 장로(소망교회)

**강 사 :** 이문옥 전 감사관

**간담회 발제자 :** 박영률 (대책위 상임총무)  
서경석 (대책위 협동총무)  
백종국 (대책위 연구분과장)

\* 제 1부 예배, 제 2부 간담회로 진행됩니다.



23일 오후 흑한 날씨 속에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열린 수서비리 규탄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수서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찬 기자>

# ‘수서’규탄 첫 거리행진

## 경실련 파고다~명동성당...국조권 요구

### 광주서도 도심시위

‘수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은폐·축소수사 규탄과 국정조사권 발동 및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통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23일 서울·광주 등지에서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종로2가 파고다공원에서 회원·시민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서사건 재수사 촉구 및 정경유착·부패 척결을 위한 시민대회’를 열고 국정조사권 발동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전면 재수사,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수서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주최한 첫 옥외집회인 이날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수서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투기와 정경유착 비리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제2·제3의 수서사건을 막기 위해 스투기 근절을 위

한 세계 개혁 △금융실명제 실시 △검찰·경찰·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등 제도적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사로 나온 이문옥 전 감사관은 “80년 도시계획법상 자연독치였던 수서지구에 주택조항 특혜 분양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정경유착의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면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 중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시민운동 차원에서 결성한 ‘수서비리 진상규명 위원회’ 위원으로 이세중 변호사(위원장), 이문옥 전 감사관, 이각범 서울대 교수 등 1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오후 4시께 집회를 마친 뒤 종각~음지로입구~명동성당까지 2.5km 구간을 인도를 따라 행진하며,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여비서 천은주(24)씨와

전 홍보담당상무 이정웅(49)씨의 사진이 담긴 ‘시민수배전단’ 1만 여장을 행인들에게 나눠줬다.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의장 이범영)와 서울민족민주운동연합(의장 김희선)도 이날 오후 4시께 명동성당에서 회원·시민 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서비리 주범 노태우 정권 규탄대회’를 갖고 △특별검사제 채택

△민자당 해체 △비리주범 노정권 퇴진등을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오후 6시께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경찰이 막자 명동 일대에서 시민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며 거리홍보를 벌였다.

한겨레

91.2.24

**'수서' 의혹과 시민정신**  
제2, 제3의 이문옥 감사관을 기다린다

있는 대로 밝히고 처리할 것은 법에 따라 처리 할 것"이라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검찰수사는 이미 끝마무리쪽으로 기울 어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지난 주말 대한변호 사협회의 결의문 채택이나 시민·재야단체들의 거리집회와 시위에 전례 없이 큰 관심이 쏠린 것도, 국민들의 기대와 정서를 외면한 수사당국 의 반독립성과 정치권의 부도덕성에 기인한 것 이라고 생각된다. 법질체에 의해 해결이 불가능 하다면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나설 수밖에 없 지 않으면서 절박감이 널리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 실련)이 변호사·대학교수 등으로 '시민조사위원 회'를 결성하고 '시민 수배전단'을 뿌리며 수서 비리 진상규명에 나섰고 이문옥 전 감사관도 이 날 집회에서 "국민 스스로가 시민단체를 결성해 행정을 감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한다. 대 한변협도 그들 스스로 독자적인 진상조사에 나 서 정치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국민적 감시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으며, 신문광고를 통해 시민 제보를 접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들린다. 국 민들의 '자력구제' 몸부림이 구체화돼 가는 조짐 이 역연한 대목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은 제2, 제3의 이문옥 감사관의 출현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 이다. 앞서 당정회의의 메모 유출경위를 조사하면 서 관련기관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확산을 막고 내부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쪽에서는 '위'에서는 제2의 이 문옥 감사관이 나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전언을 곁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신을 신뢰로 바꾸고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는 것은 의혹을 덮어두고 진실에 입다물고 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부정과 불의를 고발하는 건전한 시민정신이 꽃필 때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그러한 민주시민의식의 발로, 곧 저항권의 정당한 행사만이 온 국민이 수서위 의혹의 은폐에 눈감고 동조했다는 치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 는다. 마침 검찰총장 자신도 기자간담회에서 수 서위 의혹의 끈질긴 초점이 되고 있는 '비자금 3백 억원설'에 대해 "이는 것이 있으면 알려 달라" 고 기자들에게 주문했다지 않은가. 제2, 제3의 이문옥 감사관을 국민들과 더불어 기대해마지 않는다.

한겨레 91.2.26

'수서특혜' 당정회의의 메모 유출을 둘러싸고 정부기관끼리 벌인 소동이나, 여당 수뇌부의 '수 서' 결재 따위의 새로운 의혹들을 막무가내로 덮어누르려는 검찰의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이 나라 권력집단에 대한 분노와 그러한 정치, 그 러한 수준의 행정밖에 갖고 있지 못한 국민으로 서의 모멸감을 가누기 어렵다.

메모 유출문제만 하더라도, 그 내용으로 해서 더 큰 의혹의 과녁으로 떠오른 청와대나 그동안 사건 수사를 벌여온 검찰 또는 감사원이 맨먼저 했어야 할 일은, 그런 주요문서를 숨겨온 데 대 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그 내용을 서둘러 조사 해서 진상을 공개하는 일일 것이다. 그것이 민 주사회의 상식이요, 공직자의 당연한 도리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국민들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상부'로부터 유 출경위를 보고하라는 모욕적인 불호령이 떨어지 고, 그 메모를 갖고 있던 검찰·감사원·건설부 등 관련부처가 다투어 "우리쪽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하느라 여념이 없는 해괴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권력집단의 뻔뻔스러움이 이럴 수 없는 것이다.

민자당 수뇌부가 '수서특혜'를 서면결재했다는 대목을 놓고도 우리는 몇차례나 제말을 뒤집은 건 정책위의장이나 그 거짓말에 장단 맞춰온 검 찰, 또 이제 와서 그 서류가 분실돼 내용을 수 없다는 민자당에 대해 할 말을 찾지 못한다. 그 러나 적어도 스스로 천하공당으로 자처하는 집 권여당의 '대표최고위원' '최고위원'이라는 사람 들이 그동안 아랫사람들을 통해 구두보고를 받 았다느니 공람문서에 서명했을 뿐이라느니 하는 말이나 흘리고 그들 자신은 주권자인 국민들에 게 단 한마디의 해명조차 하지 않고 버티는 태 도는, 백보를 양보해서 생각해도 민주주의국가의 정치지도자의 그것과는 턱없이 거리가 멀다. 민주정치니 주권자니 하는 것이 권력 담당자의 기본에 따라 꺼냈다 감췄다 하는 정치적 장난감 이 아닌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검찰이 말했듯이 평민당에 제 공된 2억원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당 상층부에 대한 보강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된 다. 마찬가지로 세 최고위원의 서면결재로 증폭 된 민자당으로의 정치자금 유입 의혹을 밝혀내 기 위해서도 여당 수뇌부의 소환조사 또한 마땅 히 진행돼야 한다. 대통령 자신도 "밝힐 것은

**三星 水西당 특혜의혹**

**6 만여坪 택지지구서 제외**

**李文玉씨 주장**

83년 12월 12일 택지개발사업의 대상이 된 6만여평 택지지구에서 5만여평의 택지 제외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의 내용은 '삼성건설'이 83년 12월 12일 택지개발사업의 대상이 된 6만여평 택지지구에서 5만여평의 택지 제외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내용은 '삼성건설'이 83년 12월 12일 택지개발사업의 대상이 된 6만여평 택지지구에서 5만여평의 택지 제외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내용은 '삼성건설'이 83년 12월 12일 택지개발사업의 대상이 된 6만여평 택지지구에서 5만여평의 택지 제외된다는 주장이다.

한국일보 91.2.24

단기 기획재정

# 「수서」는 재벌놀이터인가

## 이문옥 전감사관 「삼성생명땅」 본격수사 촉구

“수서 인근 개포지구 주민들은 한보와 주택조합 쪽보다는, 지난 80년대 초부터 녹지였던 수서지구에 12만평의 땅을 사 두었던 삼성생명 쪽에 더 큰 의혹을 품고 있다. 한보그룹은 삼성생명 소유 녹지가 곧 풀릴 것이라는 기대 아래 지난 88년부터 이곳에 뛰어들어 7만여 평의 땅을 산 뒤 주택조합을 끌어 들여 큰 물의를 빚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수서 특혜 민간인 조사단 자격으로 수서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이문옥 전감사관(53)은 본보가 처음 보도한 ‘또 하나의 수서 의혹 삼성생명’ (2월23일자)을 본 뒤 26일이 같이 말했다.

이 전 감사관은 “택지개발 예정 지구에서 제외된 6만1천평, 수용된 4만3천평 가운데 연고권이 인정된 2만3천5백평 그리고 노선이 변경된 지하철 3호선 연장 구간(양재-수서)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이 진작부터 제기됐어야 했다”며 “내

인터뷰



경실련 조사단원으로, 한보의 '수서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이문옥 전 감사관은 "이 조사가 끝나면 곧 삼성생명의 수서 특혜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기로 되어 있는 2만3천5백평 중 1차분인 4천9백여 평에 국민주택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을 보장한다며 보험 가입자를 늘려 왔던 삼성생명이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다는 것은 보험 가입자의 후생 복지를 위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보그룹의 수서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이 전 감사관은 “이 조사가 끝나면 곧 삼성생명의 특혜 의혹을 파헤치겠다”

해야 했던 이 전 감사관은 “중앙일보 이종기 부회장이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말을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에게서 직접 들었다”며 감사 중단은 상부의 압력 때문이었음을 확인했다.

지난 1월15일 감사원으로부터 파면된 이 전 감사관은 “파면장이 곧 국민이 나에게 준 훈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서 특혜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사 가운데 ‘제2의 이문옥’이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며 “나같은 희생자 없이 의혹이 밝혀지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바른길을 가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감사관은 “감사원과 검찰이 올바른 감사와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돼야 한다”고 말하고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 중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순철 기자)

## 병원설립허가 6만평 특혜 의혹 「비업무용」상부지시로 감사포기

가 마지막으로 감사하다 중단했던 그 땅이 이제는 의혹 수사의 전면에 부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건설부 고시일(89년 3월21일)을 1주일쯤 앞둔 그해 3월 16일 보건사회부로부터 병원 설립 허가가 난 6만1천평에 대해서는 특혜 의혹이 더욱 짙다고 말했다.

“그해 6월에 ‘대도시 종합병원 설립 제한 조치’가 풀렸는데 어떻게 3개월이나 먼저 허가가 나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외됐는지 이

해할 수 없다. 1년 전인 88년 서울시 자료를 검토하려 갔을 때도 서울시 관계자들은 허가가 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이 전 감사관은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삼성생명이 보험 재무 관청인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지난 89년 6월이었다”며 “수용된 4만3천평에 대한 연고권이 그렇게 쉽게 인정된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가운데 삼성생명이

고 밝혔다.

“땅은 경제 발전과 복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하는 그는 “땅값이 오르면 사회 간접 자본과 복지 시설이 들어서기 힘들기 때문에 재벌의 땅 투기는 전국민과 국가를 피해자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비업무용 땅에 대한 과세 실태를 조사하다가 상부의 지시로 마지막 감사 장소인 삼성생명 소유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땅을 조사하지 못하고 도중 하차

민주당보  
91.2.27

## 열사여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지광 김동수 열사의 동상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열사는 열사의 숨결이 남아있는 모교 교정에 우뚝섰습니다. 열사의 희생은 조선대학교를 오고가는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살아남은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자문해봅니다. 해놓은 일이 너무나 미미합니다. 부끄럽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열사가 열망했던 민주화는 이루지 못하고 쿠데타세력에게 두번이나 정권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부로부터 쟁취한 것은 광주민중항쟁이 폭도들에 의한 “광주사태”가 아니고 민주화운동이었음을 정부가 인정한 것과 약간의 물질적 보상뿐이었습니다. 군사쿠데타 세력중 상당수는 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짓밟은 것이 공로라 하여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을 받았으며 그후 제정된 국가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들은 독립유공자와 같이 국가유공자의 대열에 끼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열사와 함께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던 분중 상당수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지금까지도 전과자로 낙인찍혀있습니다. 그때 미국으로 건너갔던 어떤분은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되어야 할 사람은 전과자 또는 죄인으로, 죄인이나 전과자 취급을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을 힘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때 군사쿠데타세력은 금년 겨울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것을 자신하며 희희낙락하고 있습니다.

열사여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이번 겨울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도록 힘을 주소서. 특정지역과 특정계층만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에게 희생정신을 불어넣어주소서. 그들로 하여금 정권교체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여 주소서. 지역감정이 없는 세상을 만들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이 지역감정이 없는 세상, 부정과 부패가 없는 세상, 잘잘못이 구분되는 민주화된 세상을 이루려는 투쟁이었음을 확인시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혼백이 열사의 동상에 강림하기를 기원합니다.

1992년 6월 7일

지광 김동수 열사 기념사업회 지도위원 이 문 옥

# 양심선언자모임 결성

이문옥, 이지문씨 등 15명 부정선거 고발창구 개설  
 양심선언자 출신 양심선언자들이 공적사회의 정직적 중립을 위해 '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회장 이문옥, 이지문, 양송근 씨 등, 양심선언자 15명)은 19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충신동 한석양후원사업회 사무실에서 양심선언자모임 결성식을 갖고 "공적사회의 부당한 정치압력을 거부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결의했다. 양심선언

# 나라사랑 양심선언자모임

결성 기자회견 일시: 1992. 10. 19  
 장소: 양심선언 사무실



공무원, 군인, 경찰로서 양심선언을 했던 이문옥 전 감사관 등이 19일 오전 종로구 충신동에 있는 한석양후원사업회 사무실에서 '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 결성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찬 기자)

한겨레

92. 10. 20

## 6.6 교원유린에 대한 범불교대책위 조직표

- 증명 : 석주, 서웅, 화산, 해암
- 고문 : 탄성, 고산, 월운, 설조, 오현, 설정
- 상임지도위원 : 청화, 지선, 혜담, 이문옥,
- 지도위원 : 현근, 등광, 지원, 무상, 명진, 종림, 여연, 진관, 재홍, 정우, 지광, 지만, 도법, 법성, 현웅, 지욱, 혜총, 수완, 원택, 윤월, 안동일, 한상범, 이순규, 김재일,
- 대책위원장 : 효림, 명진
- 대책위원: 각 단체 대표자
- 상임집행위원장 : 지홍
- 재정위원장 : 유곡
- 부위원장:
- 대외협력위원장 : 법안, 최연
- 조직위원장 : 금강, 이성상
- 부위원장:
- 호법위원장 : 종호
- 부위원장:
- 상황분석실 : 이영철, 강성식
- 대변인 : 윤남진
- 조직부장 : 김남수    조직부원 : 김봉준, 정진, 신희범
- 홍보부장 : 류정희    홍보부원 : 이세용, 사유선, 황윤경, 박선애
- 호법부장 : 손상훈    호법부원 : 니상식, 이승락, 김희균
- 지원부장 : 우성란    지원부원 : 한상경, 고희경



# 이문옥 전 감사관 무죄판결 환영회 및 강연회

불기 2537년 9월 22일(수) 오후 7시

부산일보사 소강당

주최 : 부산불교인위원회 · 대한불교 부산지구불교청년회  
 부산불교교육원 · 불교사회문제연구소  
 후원 : 부산시불교연합회 · 부산불교신도회  
 부산교수불지협의회

## 적부상 비법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

김재우 前 감사관 무죄선고



김재우 前 감사관 무죄선고

김재우 前 감사관 무죄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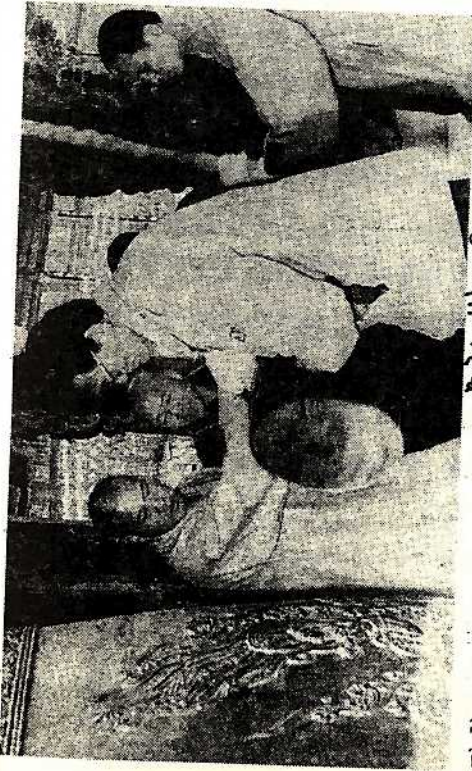
김재우 前 감사관 무죄선고

### 정부기관 情報독점 관행에 썩기박아 우사한 「良心선언」 사건에 영향 미칠 듯

김재우 前 감사관 무죄선고

김재우 前 감사관 무죄선고

1993년 9월 7일자 부산일보



문화일보 93.12.29일

## 조계사 「시국광채」 올렸다

3:1 운동 이후 처음 農民과 '고통 분담'... 8번 打鐘 군사정권 시절에는 '침묵'

조계사 僧侶들이 3:1 운동 50주기를 맞아 3월 1일 오후 3시 1분부터 3시 10분까지 8번 打鐘을 치는 행사를 가졌다. 조계사 僧侶들은 3:1 운동 50주기를 맞아 3월 1일 오후 3시 1분부터 3시 10분까지 8번 打鐘을 치는 행사를 가졌다. 조계사 僧侶들은 3:1 운동 50주기를 맞아 3월 1일 오후 3시 1분부터 3시 10분까지 8번 打鐘을 치는 행사를 가졌다.

조계사 僧侶들이 3:1 운동 50주기를 맞아 3월 1일 오후 3시 1분부터 3시 10분까지 8번 打鐘을 치는 행사를 가졌다. 조계사 僧侶들은 3:1 운동 50주기를 맞아 3월 1일 오후 3시 1분부터 3시 10분까지 8번 打鐘을 치는 행사를 가졌다.

조계사 僧侶들이 3:1 운동 50주기를 맞아 3월 1일 오후 3시 1분부터 3시 10분까지 8번 打鐘을 치는 행사를 가졌다. 조계사 僧侶들은 3:1 운동 50주기를 맞아 3월 1일 오후 3시 1분부터 3시 10분까지 8번 打鐘을 치는 행사를 가졌다.

문화일보 93.12.8

# 인사말

이문옥(재가불자연합 공동대표)

우리는 한국불교 중흥의 길을 찾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는 불교개혁의 기치를 내건 스님들과 개혁을 바라는 재가불자들이 함께 모여 개혁의 방향을 찾는 자리이고, 개혁의 줄거리를 굳혀가는 자리이며, 불교중흥의 길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불교개혁의 방향은 자주화, 민주화, 현대화이고, 이를 위해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불교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거의 모든 언론에 비친 국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중단개혁추진회(이하 '범종추')의 개혁방향이기도 합니다.

범종추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수많은 문건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서야 합니다'라는 제하에 이천만 불자에게 드리는 호소문('94년 4월)은 '우리불교가 안고 있는 내부의 문제점으로 사부대중의 화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인사·재정 등이 소수의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중략- 개혁은 바로 사부대중의 뼈를 깎는 자기 정화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라고 하여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가 정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로회의도 '93년 7월에 재정의 공개운영 등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개혁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서의현 전총무원장도 사퇴의 말에서 '사찰의 관리와 재정운영에 일반신도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반성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이제 우리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를 세울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부대중이 함께한다는 말은 승가와 재가가 물과 기름의 합성이 아니고 물과 우유의 혼합을 의미하고 있음도 분명합니다.

아무쪼록 이 공청회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하여 내딛는 힘찬 발걸음이 되고 받침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교개혁과 재가불자의 위상 및 역할 공개토론회  
94.5.21

## 더불어 생각하며

### '법난사과' 불교숙원사업과 바꿀수 없다

옛날에 사자 한마리가 깊은 산속에 살면서 자기는 짐승 중의 왕이므로 모든 짐승을 돌보아줄 책임이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 하루는 어미 원숭이가 두마리의 새끼원숭이를 사자에게 부탁하고 먹이를 구하러 떠났다. 그런데 사자가 깜빡 조는 사이에 독수리가 새끼원숭이를 채어 날아가려고 하였다. 마침 그때 사자가 잠에서 깨었다. 사자는 독수리에게 믿음성을 잃을 것이 부끄러워 그러나 재발 새끼원숭이를 돌려달라고 애걸하였다. 독수리는 사자에게 그렇게 믿음성이라는 것이 귀중하다면 어디 내 앞에서 목숨을 바쳐보라고 하였다. 사자가 두말없이 벼랑에서 몸을 던지려고 하자 독수리는 사자를 말리면서 잡으로 기록한 일이라고 탄복하고 새끼원숭이를 돌려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믿음을 강조한 말로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정부 인사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이다.

#### 최내무 진정한 사과부터

김영삼 정부의 실세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최형우 내무장관이 지난 16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탄성 스님 등을 방문하고 18일에는 합천 해인사에 계시는 원로회의 의장인 해암 스님과 양산 통도사에 계시는 종정 월탄스님을 방문하였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최 장관은 불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지난 3월29일과 4월10일에 각각 경찰을 투입하여 불교 조계종단 개혁을 위해 조계사 경내에서 기도정진중



이 문 옥  
불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재가 불자 연합 공동대표

인 6백여명의 스님들을 무차별 연행하는 등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3선 연임을 돕다가 3·29법난과 4·10법난을 유발하였고 그로 인해 불교계로부터 "대통령 공개사과와 최형우 내무장관의 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자이다. 최 장관은 이들을 방문하여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인가.

#### 숙원사업 결국 공약사업

최 장관이 총무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은 3·19법난과 4·10법난에 대한 책임 대신에 '불교계의 숙원사업'을 들어주겠으니 불교계의 상징인 종정 스님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한테 이를 공약으로 받으라는 것이다. 최 장관은 숙원사업이라는 선물로 법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숙원사업이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 오

랫동안 소원해온 사업을 말한다. 이는 군사통치 30년 동안에 정권유지용으로 사용했던 유물로써 사라져야 할 용어인데 최 장관이 또다시 사랑발림용으로 이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 약속은 믿음이 바탕

최 장관이 들어주겠다는 불교계의 숙원사업이란 어떤 것인가. 불교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숙원사업의 대부분은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던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 장관의 불교계 방문은 첫째, 김영삼 정부가 국민과 불교계에 약속했던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부를 파기했다는 것을 알리는 절차이고 둘째, 법난책임을 묵인해준다면 그 파기했던 약속을 살리겠다고 알리는 방안이며 셋째, 숙원사업이라는 선물을 줄 터이니 불교계의 상징인 종정 스님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에게 법난책임을 묵인하겠다는 맹세를 하라는 것으로서 불교를 정권에 예속시키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약속이라는 것은 믿음이 바탕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사자가 원숭이에게 믿음을 잃을까 부끄러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원숭이가 새끼를 살리려 했던 옛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되새겨지는 오늘이다. 누구든지 약속한 것은 지키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믿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기를 바라면서 최 장관의 자성을 촉구한다.

한겨레 94.6.24





1212 군사반란자, 성수대교 부설시공업자, 세금도둑은 모두 법정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중에 제일 큰 도둑은 나라 도둑인 1212 군사 반란자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 정치군인집단은 자신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정승화 계엄 사령관을 대통령 허가없이 불법 연행하고, 최고 지휘부인 노재현 국방부 장관과 국군 통수권자인 최규하 대통령도 위협, 강제로 사후 승인케 하였습니다. 검찰도 전두환, 노태우 등의 군사 반란죄를 분명히 인정하였습니다.



검찰의 1212 군사반란자 기소유예 조치는 법치주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에 정면 위배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검찰은 법을 위반한 자를 재판에 회부하고, 사법부는 법에 따른 심판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빵을 훔치면 도둑질이고, 빵공장을 훔치면 도둑질이 안되나요. 법은 형평성이 생명입니다. 1212 군사반란자를 기소유예하면 기소할 범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민특위의 실패는 친일파에게 부귀영화와 권력을 안겨주었고, 1212 군사 반란자 기소의 실패는 5, 6공 정치 군인세력의 재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1212 군사반란자의 주역 전두환, 노태우 집단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반란자들은 출세가도를 달려왔고, 정호용, 박준병, 허화평, 허삼수는 아직도 현직 국회의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일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이 일장서야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2.12를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 1212 군사반란자 기소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자들에게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큰소리쳤지만 사실은 호랑이 젖을 먹으며 사육된 것입니다. 이제 양심적인 민주시민이 나설때입니다. 반민특위의 좌절을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민주개혁정치모임은 1212 군사반란자들을 법정에 세워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민족사의 새로운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대전 부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모입니다. 민주당은 재야의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12.12 군사반란자 재판회부와 우부과이러운드 대책을 위한 국민결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1994. 12. 10(토) 오후 2시

장소: 서울의 광장

**내부비리 고발자 지원센터**  
**WHISTLE-BLOWING**

□ 내부비리 고발자 지원센터는 . . .

「내부비리 고발자 지원센터」는 최근 동아건설 비자금 조성, 북구청 세무비리 등 우리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구조적인 권력형 비리를 직시하고 학계, 변호사, 시민들이 힘을 모아 각종 비리들을 척결하기 위해 만든 시민운동 전문센터입니다.

또한 본 센터는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비리가 국가사정기관에 의해서 속속들이 파헤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고발운동기구'를 조직하여 짝어있는 사회 곳곳에 튼튼한 새 살이 돋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공, 사조직내의 구조적이며, 고질적인 비리에 대해서 침묵과 무기력만이 깊이 퍼져가는 조직공토와 사회분위기에 주목하며, 용기있게 경고의 호가를 부는 양심적인 내부자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센터입니다.

소장 박연철 변호사

□ 내부비리 고발자 인터뷰



이문옥 前. 감사관

우리 사회에는 양심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내에서의 '양심 파 정'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회와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용이 있게 호루라기를 불면 보복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양심과 용기'가 지켜져야 합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제 시민과 [참여연대] 내부비리 고발자 지원센터가 함께 권력의 파수꾼이 되어 사회적 공해인 비리와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 Whistle Blowing(내부비리 고발)이란?

사회에 구조적으로 은폐되고 있는 부정과 비리에 대한 내부인의 항의이자 거부의 표현으로서 '파거'에 조직의 구성원이었거나 또한 현재 그러한 사람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또는 국민을 속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거부나 항의를 표시하다가 오히려 보복을 당하게 되고, 결국 외부에 그러한 문제를 호소하게 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 고발은 내부에서의 반대, 이의제기로 부터 시작하여 법원, 공청회, 청문회에서의 증언, 매스 미디어나 정부기관에 대한 제보, 신고 등의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5·18 학살자 불기소 처분 규탄대회'** 검찰의 5·18 학살자 불기소 판결이 나와 학계·재야·시민·학생 단체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5·18 진상규명 관련 단체들은 현재 명동성당에서 5·18 학살자 전두환·노태우 처단'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으며 불교계도 5·18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 탑골공원에서 5·18 학살자 기소 관철을 위한 시민 결의대회를 갖고 명동성당까지 평화행진을 하였다. 사진은 지난 7월 27일 장충공원에서 열린 '5·18 학살자 불기소 처분 규탄대회'. 왼쪽부터 첫번째 지선스님, 세번째 이문옥 전 감사관, 네번째 진관스님. 황석선 기자



**부패추방 '시민연합' 추진** 28일 오전 서울 명동 여자기독교청년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부정부패 추방 시민연합 창립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한완상·이세중) 기자회견장에서 이문옥 전 감사관이 설립취지문을 낭독하고 있다. 유창하 기자

한겨레 95. 11. 29

보훈민사추경 20000

### 부패추방 시민연대 준비위원회

각계 41명 내달 8일 단체창립 선언

盧泰愚씨 비자금사건 등  
계기로 정계와 재계의 유  
착관계가 발원되고 있다.  
기후대, 양도소득세의  
유착관계를 감시하는 시민  
연대단체가 발원된다.

「부정부패추방 시민연대  
(廣進會) 창립준비위원회  
는 28일 서울 명동 YWC  
A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3일 80명 창립대원을  
 갖고 단체를 창립한다.

장관 등 부정부패에 대항  
간사 등 41명 단체 창립을  
등 부추방(廣進會) 창립준비  
신규총장과 부추방준비단  
민사추방준비위원회  
장을 맡고, 洪準植(연호사  
金勳신부)를 단장으로 41  
교수 부추방준비단 등에  
명이 참여하고 있다.

〈韓亞奎기자〉

41명 95.11.28



「깨끗한 사회 우리손으로.」 28일 서울 YWCA 강당에서 열린 「부정부패추방 시민연대」 창립준비위원회에서 李 文玉 전 감사관이 설립취지문을 낭독하고 있다.

2.92년/95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

# 이문옥씨 광주시민후보로

오늘 1천명 선언 "밀실공천 실망"...동구서 무소속출마

【광주=박화강 기자】 전남대 정환담 교수와 조선대 문병란 교수, 유남영 변호사 등 광주지역 각계 인사 등 시민 1천여명이 6일 오전 9시 광주기독교청년회관 백제실에서 14대 총선과 관련해 '광주시민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시민선언에서 "광주민중항쟁에 대해 '군부와 시민이 모두 잘못했다'는 양비론을 펴는 민자당과 밀실·낙하산·내썩기식 공천을 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냉소와 허무

주의 무관심을 낳게 했다"라고 지적하고 도덕과 참신성을 갖춘 '시민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광주시민선언은 "어떤 정파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상대적 선택'을 강요받거나 기권까지 선택할 만큼 팽배해진 선거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시민주권과 참정권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오는 7일 오전 9시 을

시민후보로 무소속출마할 것"이라고 밝혀 그동안 끈질기게 출마설이 나온 이문옥(55) 전 감사관의 출마를 예고했다. 한편 이 전 감사관은 최근 광주 동구에서 무소속 출마 결심을 굳히고 7일 14대 총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겨레 92.3.5

## 광주 '시민 선언' 발표

각계인사 1천명 이문옥씨 오늘 무소속출마 선언예정

【광주=안관옥 기자】 광주지역 재야·학계·종교계 등 각계 인사 1천여명을 대표해 서명원(50·전 전남대 학생과장)씨 등 4명은 6일 오전 9시 광주기독교청년회관 백제실에서 14대 총선과 관련해 민자당과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 하고, 시민후보 추대를 내용으로 하는 '광주 시민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민선언에서 "어떤 정파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동안 '상대적 선택'을 강요받거나 기권까지 선택할 만큼 팽배해진 선거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으로 부터 벗어나 시민주권과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나선 것"이라며 무소속으로 이문옥(55) 전 감사관의 출마를 시사했다. 이들은 민자당과 민주당의 우 두머리에만 아부하는 전근대적 정치 행태와, 시민을 무시한 희망없는 공천을 신랄하게 비판한 뒤, 광주가 안고 있는 고난의 십

자가를 짊어질 자랑스런 우리 대 표를 내세워 광주 시민의 자존심을 지켜나가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선언이 나오기까 지 정치권력과 제도정당 등으로 부터 온갖 협박과 회유가 있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과 사랑으로 출기차게 추진해왔다"며 이 선언이 1백20만 광주시민의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바랐다. 한편 시민들의 추대를 받은 이문옥 전 감사관은 광주시 동구에

한겨레 92.3.7

이문옥이 국민여러분께 아뢰니나

### 1. 이 땅의 양심과 더불어 광주로

저는 이제 진흙탕같은 정치판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온갖 권모술수와 남을 짓밟아 야 내가 산다는 악육강식의 논리가 횡행하는 선거에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저의 정신은 맑아만가고, 저의 몸은 동실 떠 있는 느낌입니다. 그간 수많은 고뇌와 번민으로 설쳐야했던 하안팎, 험령거리며 나가오던 혼란의 몸짓, 아우성-나가선 안된다. 거기가 어떤곳인데. 내가 뭘 한다고, 뭘것 같으나 차라리 잡혀 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2년전, 제벌의 비업부응 부동산 진상을 알고 고민했던 모습이 자꾸 되살아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들의 올바른 뜻을, 민주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할 수 없기에 또다시 험난한 길을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심이 부르는네 차마 한 몸의 평안만을 고집할수 없기에 이렇게 결심하자 저를 억누르고 있던 온갖 고민이 나 떨어져나가고 저의 몸은 이땅의 양심에 떠받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희망이요, 성지인 광주로 가고 있습니다.

### 2. 정치만은 하기 싫었는데

저는 지금껏 50평생을 살아왔지만 천성이 남에게 아쉬운 소리 못하고 웬만하면 제가 손해 보는, 악삭파르지 못하고 어수룩한 사람입니다. 앞에 나서기 싫어하고 자기 잘난체하는 건 딱 질색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어찌해야합니까. 내가 최고나, 나보다 잘난놈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과시해야되고 때로는 한표 부탁한다며 굽신굽신 거려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구걸하는 벼슬이라는 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제가 민주당 공천에 영입이 확정된것처럼 언일 보도 될때 허허 웃으며 신경쓰지 않았습니나.

저는 감옥에서 나온 91년 6월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부정고발센터의 내 포를 맡아 정경유착과 정부의 예산집행 비리를 파헤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1월에는 저의 책 <<그래도 못 나한 이야기>>가 간행되어 출판기념회도 있었고 책이 많이 팔려 베스트 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출판기념회는 <경실련>강당에서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당시 공천소문에 공연한 모해가 있을가 두려워 제고향 나주에는 일체 연락을 하지않았습니다.

제가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제의를 받은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11월 중순 지역구와 전국구 신청서를 관계자로부터 전달받고 주위 사람들과 의논은 했습니다. 여러의견이 있었으나 그중 저의 가슴에 가장 와 닿았던말은 '너만 깨끗이 살려하느냐'라는 질책이었습니다. 정치판이 문제 있으면 '너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해야 되지, 너럽다고 피해가는게 내가 할 도리이나. 내가 지금 이렇게 시민의 감사관, 재야의 감사관으로 존경을 받는것이 이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하라는 거지, 네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정치를 외면한다면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런 곱말을 들을때마다 저는 어찌할 줄 몰랐지만 결국 영입제의를 사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민주당이 싫어서도 아니고 제 한몸만 고고히 가꾸자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훌륭하고 올곧은 분이 영입되어 공천을 받는것이 민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천의 문턱이 드러남에따라 이러한 생각이 너무 순진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92.3.7

나.

저는 뜻을 같이하는 몇 사람과 의논하여 민주당 수뇌부에 당리당락에 의한 공천이 아닌 민주발전에 적합한 사람을 영입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내세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공천 결과가 발표되자 저는 더 괴로웠습니다. 주위에서 저를 더욱 몰아 부쳤습니다. '봐라, 네가 영입에 응하지 않았으니 한자리라도 너 저런 꼴이 되는게 아니냐' 이런 질책과 함께 더불어 몇몇 곳에서 무소속 후보도 나와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들어왔습니다. 또 어느 정당에서는 전국구 영입을 끈질기게 제의해왔습니다. 서울의 어느 지역구에서는 저대로 두면 민주당 후보가 떨어지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여당을 낙선시켜야 된다고 구체적인 조칙과 자금을 제시하며 저를 나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정치권에 뛰어들 과감한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 3. 이문유, 광주가 너를 찾고있다.

광주의 시민대표가 저를 찾아온것은 2월 말 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주당 공천에 문제가 많다, 너육이 광주가 어떤곳인데, 이땅 민주주의 성지인 광주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공천을 했느냐'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분개하며 적극 내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민주당을 아졌기에, 광주 2곳을 택해 무소속 후보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광주시민의 민주열망과 순수함을 믿었기에 그 뜻에 동의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닌 다른 분을 추천하여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거한 그분은 여러 사정으로 교섭이 안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저 혼자 남은 것입니다.

결심을 하는 버릴간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출마가 정치권 모두와 민주당에 가져올 파장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도 광주시민과 똑같이 민주당을 아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현실적 내안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고, 그간 민주당과 밀접한 교류가 있어 온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14대 공천만은 민주당이 잘못된 것입니다. 음학마속의 심정으로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넓게는 민주당이 잘되는 길이고, 이땅의 민주주의 발전에 귀중한 교훈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조직만이 발전을 보장한다고 봅니다.

광주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희망이자 성지입니다.

광주시민은 이나라 역사가 흔들릴때마다 피로써 이 민족을 지켜온 역사의 동불이자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제 또 한번 역사의 선택이 눈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3월 24일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잔치입니다. 주권을 가진 여러분은 잔치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흥겹고 가슴 부들해야할 선거판대신 정치에 대한 냉소와 비례에 대한 고민만이 가득차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희망인 광주마저도 이런 모습입니다. 광주시민이 아끼는 민주당은 공천시 적임자를 선정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지역 광주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의무입니다. 광주가 없는 민주당이 존재합니까? 광주가 거부하는 민주당이 존재하겠습니까?

저는 너이상 공천결과와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권을 가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서 이 잘못된 현실을 고쳐야 합니다. 제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비뚤어진 세상, 침묵하는 현실에 분연히 일어나 밝은 세상을 위해 싸워온 광주시민의 부름에 너이상 개인의 평안함만 찾을 수 없어 시민후보를 수락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4. 시민의 감사관에서 국정 감사관으로

저는 27년이라는 긴세월을 공무원 생활만을 해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농사를 짓는 빈한한 가정에서 7남매의 장남으로 자라면서 오로지 양심있고 올바르게 살자고 몸부림쳐온 그저 평범한 필부입니다.

저는 많은 지식을 가진 박사도 아니고 명예로운 판사나 변호사도 아니지만 18년간의 감사원 생활을 통해 이것만은 꼭 지켜져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고 확언 할 수 있는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감정과 비케이 파벌의 권력 특점을 막기 위해서 고위직 공무원의 지역할당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27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해본 결과, 고위직공무원의 인선이 실력이나 근무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연이나 학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잘못 된 것입니다.

내구 경북은 승진의 보증수표입니다. 비케이를 위해서라면 관직까지 만들어내는 위인실관의 작태를 공공연히 벌여온 것이 그간 노태우 정권의 행각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인성을 가늠하고자 치르는 구술시험은 지역을 가르고 자의적으로 특정인들을 뽑기 위한 합리적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다시 지역감정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과거제도에서도 소시의 경우 인구비례에 따른 지역할당제가 적용되었으며 마지막 시험결과를 보면 적용한 지역 할당제가 최종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조상의 지혜는 현재와 같이 지역감정이 극심한 상황에서 귀중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고위직공무원의 지역할당제 실시와 동시에 그동안 권력배출의 특점기관인 육군사관학교의 입학정원도 지역에 따른 최내비율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또한 보완책으로 영관급 이상에 대해 서도 특정지역출신의 구성비율을 한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실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현재 치열하게 내뿜된 지역감정을 해결하는 응급조치가 바로 이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하루 빨리 정보공개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주의 실시의 기본입니다. 너육이 제가 그동안 <경실련>의 경제부정고발센터 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이 점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소한 공문서도 일단은 '보여 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게 공무원의 생리입니다.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부문서관리규정은 내용이 애매하고 모호해서 거의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정감사권이 있어 그런대로 그 공간을 배풀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 시민이 간편하게 정부문서를 열람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각종 인허가를 둘러싼 특혜시비를 방지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 할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간 제가 경제부정고발센터를 운영해왔지만 사법적 강제권과 자료접근권이 없는 저토선 활동의 제약이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운영하던 경제부정고발센터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여 좀 더 폭 넓고 깊이있는 활동을 펴겠습니다.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해온 지금까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공개법을 토대로 '세야의 감사관', '시민의 감사관'에서 이나라 국가 운영을 총괄적이고 심층적으로 나를 '국정의 감사관'이 되겠습니다.

5. 여러분과 저는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

저는 너무나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그동안 국민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은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감옥에서 풀어준 것은 국민여러분의 양심과 민주주의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이문옥을 국민여러분이 살려준 것입니다.

저는 홀몸하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도 하필 저를 선택하신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민주시민여러분의 뜻에 따랐듯이 언제라도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이길 만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겨울 어느 스닐께서 저에게 '無等'이란 호를 지어 주셨습니다. 이는 차별없는 세상에서 이땅의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뜻인것 입니다. 우연하게도 제가 출마한 광주 동구는 무등산을 끼고 있습니다. 민주와 산중인 웅장토, 금남토가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이 키워주신 이문옥은 비록 보잘 것 없고 나약하지만 민주시민 여러분의 순수한 열정과 민주와 성지 광주의 보살핌이 동쳐진다면 저 무등산처럼 온갖 어려움을 깨치고 마침내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되어 이땅의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척박한 땅 광주로 내려갑니다.

광주가 침묵하면 이나라가 죽습니다.

광주 시민이 주저 않으면 이나라의 민주주의의가 무너집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걸음으로 보잘 것 없는 제가 달려갑니다.

우리 쓰라리던 가슴을 부둥켜안고 두 눈 부릅뜨면서 일어납시다.

이제 여러분과 이문옥은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

1992. 3. 7.

이 문 옥 올림

# 이문옥씨 광주동구 출사표

## '시민후보' 출마 선언 "특정세력 권력독점 저지"

[광주=안광옥 기자] 이문옥(55) 전 감사관은 7일 오전 9시 광주 기독교청년회관에서 "14대 총선에 광주시 동구 선거구에 '시민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혀 무소속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관련기사 3면)

이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에는 뜻이 없어 거듭되는 여러 정당의 공천 제의를 거절해왔으나 광주시민의 민주열망에 가득 찬 부름에 입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의 출마이유에 대해 "선거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세워나가는 데 나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며 "출사표를 낸 것은 민주당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와 함께 "당국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특정세력의 권력독점을 막기 위해 고위직 공무원의 지역할당제와 육사 입학

정원의 지역 최대비율 명문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씨의 기자회견장에는 5·18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정동년씨,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공동의장 지선 스님, 광주기독교연합회 회장 강신석 목사 등 광주지역 재야·학계·종교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해 이씨의 '시민후보' 수락을 환영하고 시민후보 선거대책본부장에 전남대 안진오 교수를 위촉했다.

시민후보 추대와 관련해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상임의장 정광훈)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문옥 전 감사관이 보여준 용기와 신념은 시민의 대변자와 정의의 파수꾼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음을 확신한다"며 적극적으로 지지·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연합은 또 "광주시 의장 파동과 광역의원·교육위원 선출 등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자리보존에만 연연해왔던 신

기하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와 민주당의 이를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문옥 전 감사관이 출마를 밝힘에 따라 호남의 정치 1번지인

광주시 동구 선거구 출마에상자는 신기하(민주), 조규범(민자), 윤재걸(국민), 황광우(민중)씨 등 5명으로 늘어났다.

한겨레신문 7.8자

### 한겨레그림판

박재동



한겨레 92.3.8

이문옥 전 감지원이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그것도 호남정치 1번지인 광주동구에서 1천명의 '광주시민선언'을 읽고 무소속 출마를 발표해 민주당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또 이런 감작스

의 선전지역이라는 평가와 함께 호남정치의 1번지이면서도 시민이나 후보자 모두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데 아무도 의의를 달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다른 지역의 때를썩한 분위기와

있던 시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모이는 곳마다 시민선언의 주체와 '시민후보'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오만과 자만으로 가득찬 공천행포를 시

그러나 "공천은 곧 당선여부" 오만 함에서 흔들리는 시민주권을 되찾자"는 시민선언 지지자들에게 "김대중 대표에게 흠집을 입히려는 짓"이라는 화살이 쏟아졌다. 또 시민선언 서명자 중 일

# '시민후보' 등장으로 '술렁이는 광주'

## 재야도 지지선언 민주당후보 사퇴 요구

런 '돌풍이 5·18광주민중항쟁을 겪으면서 정치의식의 선전지역이 자 지던 13대 총선과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전신인 평민당이 '싸움아'를 할 만큼 북정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인 광 주에서 일어나 더욱 관심이 쏠리 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결과에 따라 특정정당에 대한 절대지지 가 정당의 정책 또는 인물에 대 한 지지였느냐, 아니면 지역감정 에 의한 지지였느냐를 증명해줄 수 있게 돼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정당이나 입후보자, 그리고 지역감정에 빠져들고 있는 유권 자들을 일깨워주는 값진 교훈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 다. 사실 그동안 광주가 정치의

는 달리 아직은 이렇다할 관련개 임이나 타락양상이 드러나지 않 은 채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다. 선거공고일 하루를 앞둔 지난 6 일까지 시내 어느 곳을 가도 선 거열기를 느낄 수가 없었다. 광 주에는 이에 제쳐놓고 전남지역도 민주당이 과연 한석이라는 교두 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는 무관심으로 기권이 많을 것으 로 예상되면서 투표율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 관심의 전부였다. 그러나 광주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개야·종교·학계 인사 등 시민 1 천명의 이름이 달린 '광주시민선 언'이 발표되고 이어 7일 이문옥 전 감사관이 무소속출마를 선언 하자 무관심과 허무주의에 빠져

민의 심판으로 고쳐주자'(광주시 민선언)는 주장에 "민주당을 쫓아내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책동"(민주당 광주시 선거대책부 부·본부장 신기하)이라며 불꽃위 는 광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전 감사관이 출마를 선언하자 "시민 선언에 나온 것처럼 그동안의 선 택이 강요된 선택이었다"며 시민 선언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이전 감사관이 묵고 있는 여관방까지 찾아와 지지와 자원을 다짐했다. 재야와 민중민주당체인 광주·전 남연합(공동의장 장광훈)은 6일 밤 긴급 중점위를 열고 격론 끝에 이 전 감사관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당 후보인 신기하 씨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부는 "자신도 모르게 이름을 도 용당한 것"이라고 해명을 요구했 고, 민주당은 "민주당 분열책 동"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결국 '외의 인물'인 이문옥 전 감사관의 무소속출마로 광주 는 선거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김대중 대표에게 흠집을 입혀서 는 안된다"며 안방을 지키려는 민주당과 "강요된 선택으로 없어 버린 시민주권을 되찾자"는 시민 선언 중 어느 쪽이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 다. <광주=안관옥 기자>

한겨레 4면 3.8일자.

한겨레 92.3.8

# 14대 총선에 즈음한 『광주시민선언』

은나라가 3·24 총선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제주까지도 공약이 재탕되고 남발하면서 떠들썩합니

다. 그러나 민주의 성지이자 이나라의 십자가인 광주는 어디를 가도 정치와 선거에 대한 허무주의와 무관심만이 짙게 깔

려있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은 착잡함 그것뿐입니다. 대통령이 광추를 방문 꿈같은 지하철 시대를 예고해도, 심지어 그동안 광주·전남·북이 뿔뿔 뿔뿔 펼쳐 선택해준 한 야당대 표가 포발을 누비며 개헌지지선을 호소해도, 여·야정당들의 오만에 찬 공천에 소망과 자존심이 짓밟힌 시민들은 좀체 어느 쪽에도 고개를 끄덕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번에는 투표를 포기해버릴까 하는 냉소와 고민만이 가슴마다 가득차 있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가장 사랑하고 80년 5월에는 불의에 항거 목숨까지 내던진 자랑스런 광주시민들의 마음이 왜 선거때만 되면 이토록 무겁고 우울하기까지 합니까? 누가 무엇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열망과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짓밟 아 좌절속에 몰아넣었습니까? 누가 양식있는 시민들에게 자신의 참정권을 포기한 채 『기권』이란 방관자의 길까지 선택 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민주당과 민주당입니다.

광주민중항쟁을 지금까지도 "군인도 잘못이지만 시민도 잘못"이라는 민자당과 선거철만 되면 『광주』를 노루뿔 우려 먹듯이 이용하다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과 자만으로 가득차 시민을 앞잡아 보면서 '공천행포'를 저지르고 있는 민 주당이 모두 공범입니다.

이나라의 민주주의를 격정하며 우리정치가 국민을 저버리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망해온 광주시민들은 우리가 사랑하 는 민주당마저 당선만되면 시민의 뜻을 내팽개칠 줄 몰랐습니다. 정당의 우두머리에게 아무만 하는 사람을 또 공천해놓 고 "미워도 다시한 번" "떨어져서 대권한 번" 하며 선택을 강요할 줄 몰랐습니다. 시민들이 한표 한표 꼭꼭 눌러 우리 살림을 맡긴 시의원을 마치 자기들의 장난감인양 주무르면서 시의장도, 부의장도 제비위에 안맞으면 같이치우려드는 국



회의원을 또 공천해 놓고 정권교체 내세우며 지지를 강요한 한다면 이것은 희망없는 정당들이 하는 시민에 대한 모독이요 공천형포입니다.

국정감사와 입법활동 능력은 '합량미달이더라도 한때나마 우두머리집 식객이었고' 시민에게 군림하고 우두머리에겐 고분고분하다고 공천했다면 광주시민들의 참정권을 너무나 무시한 주권모독입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사명은 저버려도 지역감정과 지역분할의 반사이익만을 따먹으면 당선된다는 오만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다못해 슬프게까지 합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공천형포와 주권모독에 어쩔수 없이 끌려다닌다고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민주주의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뒷전으로 돌아앉아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다가 참정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14대 총선이 오는 3월24일 치뤄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워도' 또 찍어주는 동정주의 참정권은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에 따라 광주가 안고있는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자랑스런 우리의 대표를 찾아야 합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 앞에 흔들리는 우리의 시민주권을 회복시켜야 되고 손상된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강요받고' 빼앗긴 참정권을 회복시켜 도덕적이고 참신한 진정한 우리의 대표를 선택할 때 밀실과 낙하산 공천으로 특특히 재미를 본 제도정당들에게는 국민의 심판이고 세계는 다시 우리의 총칼없는 주권회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역사가 흔들릴 때 항상 조타수를 맡아온 자랑스런 광주시민 여러분!

온갖 회유와 협박, 고통속에서 어렵게 나온 『광주시민선언』은 우리의 텅빈 가슴을 채워주는 희망입니다. 모두가 일어나 늘린 가슴을 펴고 우리의 주권을 찾을 때입니다.

시민여러분!

우리는 7일아침 올곧게만 살다가 척박한 땅 광주의 부름을 받고 두손 불끈쥐고 두눈 부릅뜨면서 별뿔일어선 한 용기 있는 시민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만나 잃어버린 우리의 주권을 되찾읍시다.

1992. 3. 6.

## 1천명의 광주시민들

# 광주시민께 드리는 호소문

### 1. 이문옥 감사관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입후보자 추천 대열에 동참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민주의 성지 광주, 양심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광주시민들이 오늘의 정치현실을 지켜보면서 이대로 둘 수 만은 없고 걱정들을 합니다. 이제까지 '미워도 다시한번' 하면서 밀어주었던 사람은 광주시민들의 뜻을 배반하고 오히려 부정과 비리마저 서슴치 않았습시다. 또한 뒷사람들의 눈치나 슬슬보는 그야말로 진정한 광주시민의 대변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광주시민들은 이러한 모습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시대의 양심이자 정의의 파수꾼인 이문옥 감사관을 시민의 대변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 2. 잘못했으면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치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악의 뿌리에서 태어난 민자당에 대해서는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광주시민들은 민주당 공천후보는 누구를 막론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 지도자인 김대중 대표에 대한 믿음이자 나라의 민주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이었습시다.

그러나 지난 지방의회 선거와 광주시의회 의장 사퇴파동 그리고 교육위원회교육위원 선출 당시 이 지역 민주당 책임자(민주당 시지부장 신기하)이 보여준 오만불손과 시민주권의 무시는 그대로 방관할 수 없는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치인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함에도 지지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힘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3. 지역감정으로 물표를 줬다는 오명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주정부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야당과 무소속이 드물게 당선되고 이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휩쓸게 된다면 우리 시민이야 민자당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지지했다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감정이 있다고 여론의 집중포화를 입게 되므로 시민주권에 대한 지역감정이란 오명을 슬기롭게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이문옥 감사관은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은만큼 광주에서의 당선은 이후 민주정부 수립에 지역감정을 뛰어넘어 민주당을 살리고 광주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구국운동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 4. 국회의원의 역할과 기능에 알맞은 사람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므로 청렴결백하고 겸손, 성실한 인격을 바탕으로 각종 법안의 입법 활동과 국정감사 감독을 잘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선편성과 집행과정의 감사활동 등 전문성이 탁월하고 양심적으로 빛과 소금역할을 할 정직한 국회의원이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탄생해야 합니다.

#### 5. 정치하기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고 구국을 위한 주권회복운동입니다.

김대중 선생께서는 이문옥 감사관 같은 사람이 세 사람만 있어도 우리나라가 바르게 될텐데 하면서 아쉬워하셨습니다. 우리 는 이문옥 감사관을 광주시민의 대변자로 만드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민족화합의 길이요, 광주시민 승리의 길임을 확 신합니다.  
정희는 외로운 것이고 고독한 것입니다. 이 사회를 건지고 살리려면 광주시민이 또 한번 앞장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 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성금을 보내주시고 방문하여 주시고 이웃 친지분께 홍보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 자원봉사 하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 228-2913~5)

《시민모임 구좌번호》

◎ 광주은행 001-02-650128 서명원

1992. 3. 9

### 이문옥후보 추대를 위한 시민모임

(가나다 순)

강광식	김대현	김연화	김종순	문길남	박승이	서정서	서상원	선영기	안왕순	유남영	이명심	이정애	임형순	정해룡	최보영
강구선	김덕기	김영우	김종운	문남수	박승만	서경숙	서석원	선진규	안용섭	유옥심	이문석	이정우	자성	정해성	최상동
강대원	김동렬	김영빈	김종철	문동천	박신자	서경식	서성원	선희숙	안정희	유원용	이문수	이정팔	장갑수	정해체	최선준
강대홍	김동수	김영수	김진환	문병권	박영재	서공순	서수현	선종수	안종철	유은근	이미아	이정호	장두석	정향자	최성문
강덕수	김영인	김영일	김진회	문선주	박왕재	서관식	서수덕	성동식	안진오	유재현	이미옥	이정회	장미희	정향자	최영철
강명호	김동일	김영일	김춘동	문순일	박원아	서광호	서승렬	성찬성	안창수	유중렬	이민우	이종수	장병기	정현옥	최용섭
강복자	김동호	김영자	김태우	문승식	박은숙	서구원	서승원	손철휘	안평순	윤경옥	이변우	이종평	장선호	정해민	최은기
강분희	김동환	김영자	김태규	문영미	박은옥	서규석	서신원	송강현	안형기	윤경자	이병구	이종현	장은화	정해숙	최은희
강성준	김동태	김영태	김해성	문제신	박정근	서기석	서인심	송강희	양근화	윤경자	이병진	이종현	장인원	정환담	최인옥
강성호	김만호	김영호	김해주	문재준	박정미	서기수	서양석	송경안	양동관	윤경자	이복진	이창성	장재운	정회중	최순호
강수진	김만호	김영회	김해천	문재춘	박정신	서기홍	서영운	송문재	양동익	윤광장	이삼래	이창수	장재춘	정회중	최주호
강신석	김명동	김옥순	김향림	문종수	박종섭	서남길	서영운	송민진	양동숙	윤기석	이삼래	이창준	장출일	정회중	최준식
강옥철	김명수	김옥자	김향미	문판수	박종운	서남득	서영일	송서정	양명숙	윤명숙	이상권	이창준	장한수	정환담	최준식
강요한	김명순	김옥자	김향신	문명주	박지현	서남석	서영일	송원희	양명숙	윤명숙	이상권	이창준	장한수	정환담	최준식
강혜진	김명식	김옥회	김현근	민경수	박진호	서남원	서영환	송윤희	양우희	윤명희	이상희	이창준	장한수	정환담	최준식
고숙	김명자	김옥회	김현아	민경수	박찬호	서달중	서영호	송인동	양유정	윤명희	이상희	이창준	장한수	정환담	최준식
고광덕	김명회	김용두	김현인	민기식	박찬혜	서대석	서왕석	송인현	양인자	윤성주	이상희	이창준	장한수	정환담	최준식
고광표	김미경	김용만	김현준	민문회	박찬수	서대식	서용석	송정영	양정아	윤성주	이상희	이창준	장한수	정환담	최준식
고금남	김미성	김용채	김현회	민병준	박창수	서대원	서용석	송재형	양정희	윤영규	이상희	이창준	장한수	정환담	최준식
고무석	김미성	김용철	김현근	민신준	박창영	서대홍	서원웅	송재민	양정희	윤영규	이상희	이창준	장한수	정환담	최준식
고문석	김미라	김용성	김현미	민준식	박창자	서동룡	서원호	송정길	양정희	윤영규	이상희	이창준	장한수	정환담	최준식
고옥희	김미숙	김용철	김혜미	민홍수	박창자	서동룡	서원호	송판길	양정희	윤영규	이상희	이창준	장한수	정환담	최준식
고일석	김미희	김용철	김혜선	민홍수	박창자	서동룡	서원호	송판길	양정희	윤영규	이상희	이창준	장한수	정환담	최준식
고개기	김민석	김우석	김혜선	민홍수	박창자	서동룡	서원호	송판길	양정희	윤영규	이상희	이창준	장한수	정환담	최준식
고채신	김민석	김운규	김혜선	민홍수	박창자	서동룡	서원호	송판길	양정희	윤영규	이상희	이창준	장한수	정환담	최준식
공현석	김민석	김원기	김혜선	민홍수	박창자	서동룡	서원호	송판길	양정희	윤영규	이상희	이창준	장한수	정환담	최준식
곽사호	김민석	김원기	김혜선	민홍수	박창자	서동룡	서원호	송판길	양정희	윤영규	이상희	이창준	장한수	정환담	최준식

한옥수 한정만 한철환 허수미 허창우 현해용 형광서 홍경희 홍광현 홍귀기 홍순길 홍순일 홍운호 홍인표 홍인회 홍해옥 홍희담 황대길 황덕호 황성민 황성하 황준화 황태익 황태주 신호호

조준현 조태일 조평주 조하라 조행남 조희두 조희상 주암순 주홍규 지선운 지병문 지병오 판자순 채성자 채순옥 천년봉 천득염 천홍석 최기동 최기성 최기영 최기준 최기환 최낙선 최난숙 최대우 최득진 최문성 최미연 최민옥

정대용 정동원 정만택 정무창 정미숙 정미자 정미화 정병근 정병호 정봉환 정삼수 정세환 정소영 정영석 정우택 정원택 정은숙 정의행 정익심 정인숙 정인용 정재호 정재순 정정환 정진모 정진수 정진수 정철웅 정춘자

이향숙 이현미 이현숙 이현희 이형민 이혜경 이황노 이황신 이훈규 이동욱 임동훈 임동훈 임미선 임방일 임봉환 임선모 임선숙 임양미 임영택 임영희 임영희 임옥빈 임용채 임유미 임윤희 임인수 임재복 임종집 임찬일 임평모 임한태 임현아

이순자 이순진 이순희 이승민 이승훈 이상섭 이영규 이영생 이영순 이영주 이영호 이영환 이영희 이오봉 이옥기 이은미 이은숙 이은호 이의섭 이의충 이인성 이일승 이장록 이재관 이재숙 이재의 이재일 이정기 이정노 이정도 이정란 이정래 이정신

윤정신 윤정환 윤태범 윤현자 윤혜숙 윤효현 이강 이귀 이윤 이진 이항 이경규 이경숙 이경숙 이경충 이경희 이계운 이광열 이광충 이귀님 이귀현 이금래 이금수 이길수 이덕순 이덕호 이동근 이만영 이명숙 이명숙 이명수 이명영

여향순 염우선 오갑열 오경원 오금동 오남숙 오남훈 오대평 오미순 오병수 오산원 오성근 오수성 오인석 오정목 오정호 오종관 오주승 오진택 오철진 오행태 오홍상 옥필환 우이권 위금희 위상복 위양우 위인백 위인백 위형수 유갑열 유경수 유남영

신경숙 신경식 신경진 신민수 신민서 신봉화 신상순 신선범 신선기 신수호 신수희 신숙덕 신순옥 신안자 신영숙 신영태 신영호 신은경 신장호 신정순 신정오 신태기 신학오 신현승 신현주 안경태 안금섭 안명옥 안수경 안숙희

서재경 서재관 서재천 서재택 서정구 서정룡 서정목 서정문 서정석 서정수 서정숙 서정옥 서정운 서정철 서정현 서종치 서주원 서중석 서진원 서태년 서태원 서평근 서한창 서행진 서현호 서형원 서해경 서호진 서홍원 서효운 서희석 서영규

서동순 서동술 서동신 서동우 서동운 서동익 서동일 서동일 서동주 서동현 서동호 서동환 서득주 서만기 서만석 서만수 서맹원 서명석 서미숙 서민서 서백만 서범석 서병남 서병연 서병주 서봉수 서봉진 서봉한 서상구 서상관 서상만 서상오

박판립 박판만 박향자 박현수 박현준 박형신 박형식 박화강 박홍식 박철호 배광준 배영효 배정안 배경순 배계홍 배계길 배덕호 배신희 배종수 배태순 배해경 법일군 성신일 변남길 양영원 정원정 정건우

박갑수 박경배 박경수 박경애 박경환 박광서 박광식 박근철 주금두 박남수 박남용 박대신 박대선 박돈희 박동기 박동서 박동철 박래영 박만규 박만수 박만서 박민서 박병기 박복수 박삼만 박삼순 박상철 박상희 박성후 박서훈 박성기 박성수 박세정

김혜은 김홍익 김화택 김항규 김희경 김희영 김희우 김희정 김금주 나맹호 나병식 나병철 나용철 나인기 나정숙 나종경 나종남 나현주 나원순 남평오 노영필 노정선 노준현 류제휘 류진수 류한호 모용이 문희 문경희 문기진 문기홍

김원중 김운수 김운창 김운환 김은신 김은영 김은주 김은규 김응수 김인수 김인숙 김인식 김인영 김일규 김재서 김재수 김제욱 김제임 김제형 김제홍 김진승 김점중 김정남 김정삼 김정숙 김정숙 김제안 김제영 김준경 김종남 김종대 김종수 김종욱

김민우 김민자 김민정 김병수 김병숙 김병호 김보현 김삼수 김상관 7 상덕 김상클 김상선 김서운 김석순 김선규 김선수 김선희 김성종 김성진 김성호 김소희 김수남 김수복 김수현 김수희 김순이 김시우 김신근 김아곤 김애리 김양무 김양욱

권순화 권순희 권현숙 강기대승 기원중 김진 김강렬 김건양 김경민 김경희 김경희 김관휴 김광복 김광빈 김광우 김광자 김광호 김귀녀 김규진 김근우 김금순 김금순 김금판 김금해 김기선 김기홍 김난주 김내수 김대중

**이민과 북미주후원의 결성**

○... 시민후보로 광주 동선거구의 유일한 이민족 후보(무소속) 사무실에는 이날 미국과 캐나다의 해외동포 1백20명으로 구성된 '이민족 후보 지지회'를 위한 북미주후원회가 현지에서 모은 2천4

백달러를 모으겠다는 결의문을  
 북미 이민족 후보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띤 토론이 있었다.  
 학계와 언론계 인사들의 1백20명  
 으로 만들어진 이민족 후보 지지회  
 원회는 이 지역내에 있는 이민족  
 선지역사 및 주민을 대상으로 이민  
 역사의 가르침을 이끄는 이민족  
 시민의 참된 의사와 요구가 담긴  
 날 것'이라고 이민족 후보가 건국할  
 민주조국과 지역감정 타파를 따  
 라는 해외동포들의 열망을 이루  
 여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민족 사무실을 위한 인포선  
 의와 먹거리를 제공하던 시민들의  
 열려가 이어지고 있고 경기도  
 안산과 충북 청주 등 지역선  
 성감을 보내면서 지지의 뜻을 전  
 해 이민족과 선지역사들을 위해  
 헌신이 되고 있다.

한겨레 92.3.20

**시민후보의 등장 = 광주 시민**

들에 의한 시민후보추대는 기존  
 정당 상층부에 의해 하향식 공천  
 이 이루어지는 풍토에서 유권자  
 가 선거관의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끄는 새 현상이었  
 다.

**시민 정치의식 획기적 성장**

광주의 하계 종교계 범종교합  
 망라한 시민 1천여명은 지난 6일  
 "광주민중합정의 책임을 회피해  
 온 민자당과 공천원포로 시민의  
 열망을 저버린 민주당이 이번 선  
 기에 대한 시민들의 냉소와 무관  
 심을 낳게 했다"며 "도덕과 참신  
 심을 갖춘 '시민후보'를 추대함으  
 로써 주권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  
 의해 정치에 새 바람이 일어나도  
 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시민주권과 참정권을 되  
 찾기 위한 광주 시민의 '부름'에  
 응답한 이복옥(53) 전 감사관이  
 광주동구에 출사표를 내면서 선  
 기작관 20여일동안 숨겨온 시민  
 운동이 펼쳐졌다.  
 이 전감사관이 시민후보로 광  
 주동구에 나서자 광주 시민들은  
 자원봉사와 함께 문뜰을 모아 성

금을 내고 먹거리 인세빈의류  
 제공하는 등 원화원은 시시성인  
 을 보였다.

시민후보의 등장에 따라 사설  
 상 민주당의 뒷받침이 공천이 관  
 당선이라는 광주에서 시민후보시  
 에 슬럼감이 일면서 낡기야 선거  
 막판인 20일로 예정됐던 김대중  
 민주당대표의 광주지원유세가 들  
 인 취소되기도 했다.

쟁점없는 14대 총선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던 시민후보추대  
 운동은 특징적인이나 정파가 유  
 권자의 뜻에 기스르는 정치적 행  
 태를 보일 때는 이번 쟁대지  
 지지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  
 과 동시에 시민의 힘으로 이뤄  
 고쳐보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시민 정치의식의 획기적 성장의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다.

# 아쉬움 남긴 낙선 '스타'들

이문옥 <무소속 광주동>

이름모를 시민들 격려 못잊어

"지역주의와 지역감정의 칼이 너무 깊어요. 일부 정치인들이 지역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할 때는 마치 의리를 저버리는 것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시민 1천여명의 추대로 호남의 정치1번지 광주동구에 '시민후보'로 주목을 받았던 이문옥(53) 전 감사관은 25일 기존 정치판도의 벽을 끝내 허물지 못하는데 대해 안타까워했다.

지역감정을 불모로 공천행포를 입삼는 잘못된 정치행태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이 후보는 비록 이롭게 고배를 마셨지만 유권자가 선거판의 주체로 나선 '시민후보운동'의 한 가운데서 값진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빈손으로 불쑥 내려와 조직도 사람도 없어서 막막했어요. 그렇지만 광주에 오면서 부터 이름 모를 시민들과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의 해외동포들, 수많은 민주당체들이

발뺏고 나서서 도와줘 용기와 힘을 얻고 뛰었습니다."

이씨는"대인시장 아주머니와 농민회 아저씨 한분이 손을 꼭 잡고 기려하던 따뜻한 손길을 잊을 수 없다"고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뒤 광주시민들이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개인적 영달보다는 국민편에 서서 이롭고 외로운 '민주주의의 감사관'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한겨레 92.3.26

▶ 낙선거 · 14대 총선에 할말있는 사람들 ③ 이문옥

# 광주 동구의 시민주권선언

서명원 / 이문옥후보추대위원회 대표

민주당의 아성 광주에 새바람이 일어났다. 시민후보 이문옥씨가 출마한 것이다. 비록 이번에는 미풍에 그치고 말았지만 그 뜻은 다시금 꿈꿈이 되새겨봄직하겠다. 시민후보추대위원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서명원씨의 얘기를 들어본다.

3월 6일 「광주시민선언」을 발표한 우리에게, 좌절은 분열을 낳고 의욕을 빼앗아간다고 결과에 대한 우려를 미리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선거기간만이라도 즐겁게 보내자고 당부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사회가 이 지경이 되어도 그저 앉아서 비판의 소리나 계속할 것인가?" 채택절이자 자궁심 자극이었다. 우리가 제시한 대안은 '이문옥 카드'였다.

그 대안이 시민들에게 채택은 되지 않았어도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1천명이 동의하여 2만2천명이 넘게 찬성했으니 말할정신으로 돌아가 몇곱절로 튀긴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우리는 광주 북구의 어느 동에서 진행된 구의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을 관심있게 살펴 보았다. 투표율 36%로 통합 이전 민정당의 간부가 압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주의 성지'라는 광주에 광주시민은 자부심을 갖고 있으나,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착잡한 심정을 금치 못했다.

## 광주에서부터 먼저 실천해보자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해보자. 광주에서부터 먼저 실천해보자. 정치인들을 탓하기 전에 시민의식을 먼저 깨워야 한다. 기성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알았으니 대의제의 기본정신에 따라 주민이 직접 추대하고 선출하여 정치판을 새로 짜야 한다.

민주 대 반민주의 정국구도가 선거 때만 되면 지역대결구도로 변모하여, 지난 기간의 시정에 대한 심판을 받는

선거 본연의 개념은 사라지고 전라도 대 타지역 대결구도로 점철되는 슬픈 현실만 남게 된다. 정책대결이니 공약대결이니 하는 말은 한낱 수식어에 불과하고 농정을 비롯한 물가폭등 따위의 실정(失政)을 질타하는 그동안의 구호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이렇게 하여 선거가 지나간 뒤에는 지역감정의 골만 더욱 깊게 패여도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방관하고 묵인한다. 그래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 남는 것은 허무주의요, 지역감정요, 좌절요, 실망이다. 꿈이 없다. 기대감마저도 없다.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선거대열에 끌어들이 것인가. 투표장으로 끼여이 나오도록 기대감을 줘야 할 것 아닌가. 그 기대감과 동참의 방법으로 우리는 교육책을 써본 것이다.

## 18일간은 시민들에게 희망의 기간

자원봉사자 또한 매일 2천여명이 동원되어 그 열기는 대단하였고 타지역에서 후원회 결성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들의 사기는 더욱 솟았다. 선거법규가 까다로워 혹시 위반사례가 야나가 마음조였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유인물을 배부하다가 선거운동원증이 없다는 이유로 상대 입후보자의 운동원에게 붙잡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는 사건들이 연일 발생해서 그 뒷처리가 골치거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 아줌마들의 찬거리, 음료수 등, 농민회의 쌀, 시민들의 성금, 한방을 경영한다는 어느 한의사의 보약 등은 우리들에게 힘을 재충전해주는 원천이 되었다.

3월 6일에 시작하여 24일까지 18일간은 시민들에게 희망

찬 기간이었다고 자평할 수 있다. 투표할 곳이 없어서 선거에 관심이 없던 시민들에게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광주 동구 이외의 선거구에 살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자기네 구역에는 동구선거구와 같이 시민후보를 추대하지 않았다는 질투성 비판도 들어왔다. 그러나 좋은 상품을 홍보부족에 흥정(설득)도 서툴러 높은 시민정서를 담는 데 실패했다.

국가·민족이야 어찌되건말건 당선해놓고 보자는 심보를 가진 이들은 시종일관, 우리들을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라 매도하였다. "감언이설에 속지 말라"며 우리들을 불순분자, 정부의 공작에 놀아나는 분열주의자, 민자당에 어부지리를 주려는 첩자 등으로 표현, 작공법 및 간접비유법을 총동원하여 교묘하게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야당 한사람 낙선이 전국구에까지 뻗쳐 결과적으로 두사람이 낙선된다고 그럴 듯하게 꾸며대니, 선거법 전문가라 할지라도 속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이문옥 후보는 무소속이니 당선만 되면 민주당에서는 받지 않는다 했으므로 민자당이나 국민당으로 입당한다고 흑색선전까지 하여 무소속의 불리한 입지를 심분 악용했다. 특히 무소속은 정치할 수 없다고 정당정치 당위론을 철저하게 홍보하며 "미워도 다시 한번 똥똥 뭉쳐 밀어주자"고 외치니 순박한 시민들은 정감에 의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지역 언론도 우리들의 뜻을 외면하고 취급마저 하지 않으니 기독교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실감할 수밖에...

### 민주당의 책임을 묻는다

사실 우리가 야당의석을 줄이려는 계획으로 시민후보를 내세웠겠는가. 더더욱 국회의원 한사람 선출키 위해 했겠는가.

민자당은 80년 광주를 총칼로 짓밟은 집단으로 도저히 지지할 수 없고 야당 중 비교컨대 민주당을 선호하나 그들 역시 지난 시의원 공천과 시의회 의장 선출, 그리고 교육위원 선출 파동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그 책임자인 지지부장이 입후보한 곳에 시민후보를 내세워 심판받도록 하자는 것인데, 그래야만이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고 시



광주 동구에 출마했던 이문옥씨. 그러나 기독교의 벽은 높았다.

민주권의 엄중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저들은 개인감정에 의한 것이니 또는 야당을 음해하기 위한 것이니 하며 속인적 본성을 드러낸다. 참새가 어찌 봉황의 기상을 짐작이나 하라하는 결국 높은 기독교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확인만 시켜주는 꼴이 되었다.

이번 선거가 끝난 뒤 대전에 살고 있는 친지들로부터 광주사람들에게 속았다는 즐거운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 내용은 시민후보인 이문옥 전 감사관의 인기가 단연 높아 무난히 당선될 것이란 언론보도 덕택에 이번이야 비로소 지역감정의 벽을 허물 때라고 판단하고, 특정인의 중부권 역할론이란 황당무계한 감언이설을 물리쳐 대전에서도 참신한 인물을 선출하자는 시민여론이 주효하여 결과적으로 중부권 역할을 톡톡히 해내, 마침내는 여소야대의 황금국회를 다시 창출하고 주권재민이란 기본권의 귀중함을 확인시켰다고 으스스한다.

비단 중부권의 역할이 아닐지라도 민족단합을 위해 거룩한 일을 해냈다. 진심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잘못가고 있는 정치권을 바로 잡으려면 시민이 먼저 깨어나야 한다. 지역감정으로 맞대결하는 양극단의 전근대성을 내가 먼저 양보하는 슬기로 부수어야 한다. 힘들고 벅찬 운동이나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유권자들을 설득하여 구국하는 대열에 앞다투어 동참하도록 더욱 겸손할 것이다. ■

# 양심선언



## 양심선언 감사관

# 3 이문옥

바람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양심!!



양심선언 감사관  
**3 이문옥**  
여기는 희망본부  
**민주당**

선거사무소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602-18 성광 B/D 401호  
전화 : 952-2277  
FAX : 952-3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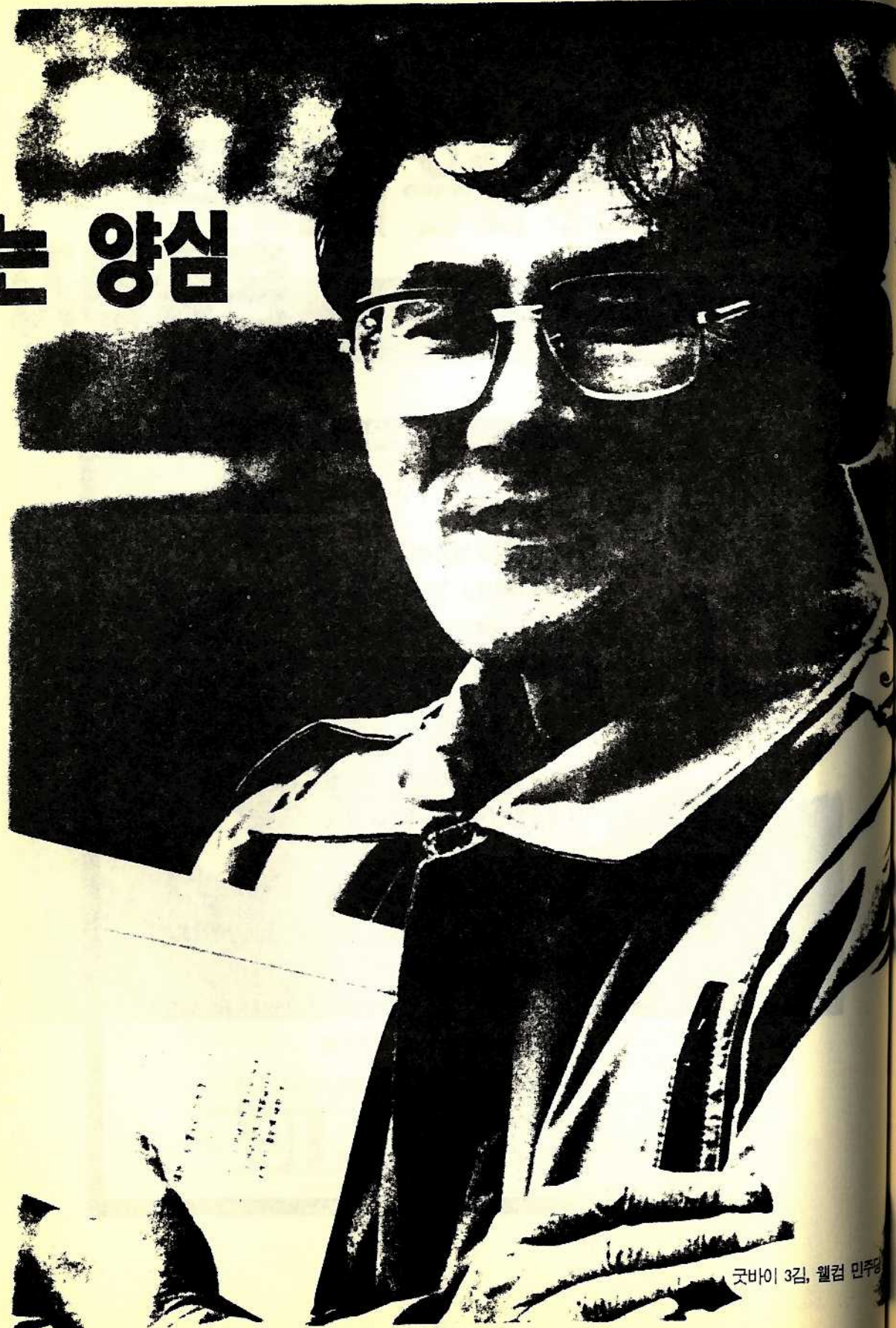
상식이 통하는 정치  
이문옥이 하겠습니다

바람은 불어도  
흔들리지

**이문옥이 걸어온길**

- 광주고등학교 졸업
- 보통고시 합격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1년 수학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연구과정(세무전공) 1년 수료
- 감사원 재외공관 감사관  
(카이로, 쿠웨이트, 방글라데시,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일본)
- 1990. 5 양심선언으로 정계파면,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 및 고등법원 파면 취소 판결
- 경실련 경제부정고발센터 대표
- 공선협 관권개입감사위원장
- 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 회장
- 12·12 군사반란자 기소를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회의 공동대표
- 5·18 학살자 처벌 및 특별법제정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자문위원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100만인시민감시단장 겸 부정부패고발센터 소장
- 민주당 노원(을)지구당 위원장

있는 양심



굿바이 3김, 웰컴 민주당

상식이 통하는 정치  
이문옥이 하겠습니다

3김 정치는 —

부패정치



야합정치



지역할거정치



망국정치



# 1. 근로자는 봉인가

근로소득세 공제율 상향조정



근로소득세 공제율

# 2. 영·육아시설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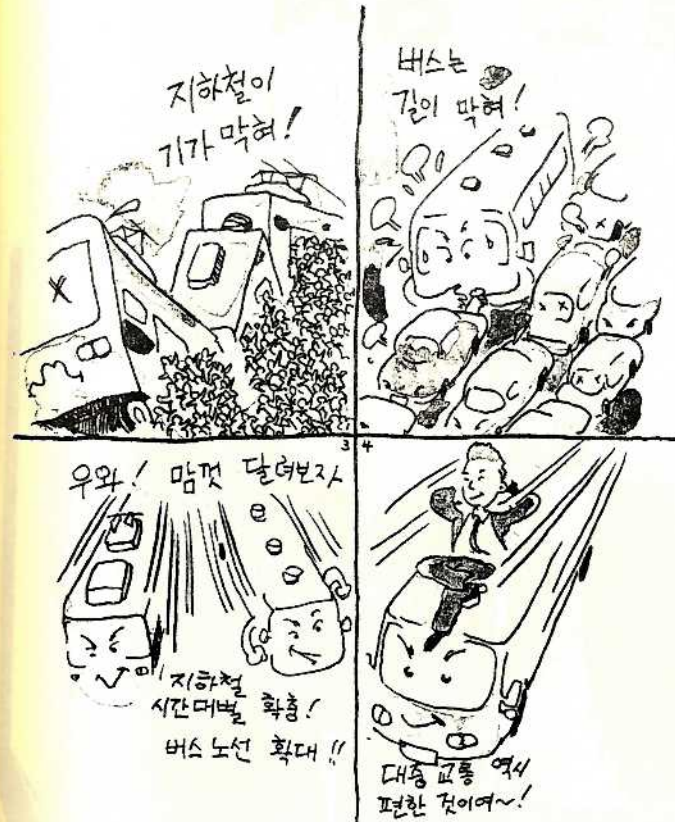
맞벌이 부부 아이들 걱정 끝



시설 확충

# 3. 교통문제 해결

상쾌한 출퇴근길



## 기타

- 중랑천·당현천의 공원화
- 전세권의 보장 (보호금액 및 임대기간 상향 조정)
- 노인복지 및 치매병 치료 시설 확대

이문옥이 펼치는  
살맛나는 세상



# 참신한 인물 산소같은 정치



### 3. 양심선언자 보호를 위한 법제정 노력



이문옥 전 감사관 등 공권력의 부정을 고발한 양심선언자 18명이 한준수 전 충남 연기군수의 관권개입 부정선거 폭로를 계기로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개혁과 양심선언 보호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변재성 기자>

장책에 대한 커다란 국민적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투표일 직전에 터진 이 중위의 양심선언은 "국회의석 10개를 날려버렸다"는 민주당쪽의 넘트리가 터져나올 정도로 투표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결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던 군 부재자투표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씨는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애쓰겠다"는 기자회견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재 공명선거 실천시민운동협의회 대학생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 전군수의 관권개입 폭로 역시 대통령직의 당적 탈퇴와 중립내각 구성 발표의 도화선이 됐으며, 관이 선거에 개입하면 여론후보는 끝장이라는 인식을 깊이 심어줬다.

### 2백명 '증언' 잇따라

특히 이 전중위의 양심선언은 공선협 고발창구를 통해 2백명이 넘는 '얼굴없는' 양심선언자들이 군 부재자투표 부정을 고발하게 함으로써 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을 '특별한 존재'의 '비법한 행동'이 아닌 평범한 존재의 행동으로 뒤바꿔 놓았다.

그러나 양심의 명령에 따라 올

곧은 행동을 한 대가로 이들이 치러야 했던 희생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이 크다.

대부분의 양심선언자들은 신체 구속과 함께 불명예제대, 현직박탈 등의 고통을 맞아야만 했다. 또 재판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실정법 위반 행위로만 결론짓는 현실의 두터운 벽도 걸림해야 했다.

이문옥 전 감사관은 지난해 1월 총무처에 낸 파면처분 취소소청이 기각된 뒤 같은해 8월 고등법원에 파면처분·취소청구 행

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지문 전중위 역시 지난 5월 4일 이등병으로 강등돼 불명예제대 대한 뒤 국방부에 제출한 파면취소 및 복직청구요청이 거부되자 현재 고등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그러나 이들은 무엇보다 "조직과 동료에 대한 배신자"라는 따가운 눈초리 속에 하루아침에 외톨박이가 된 처지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전 감사관은 "양심선언 이후 친지는

물론 가까웠던 친구들마저 하나 둘씩 멀어져갔다"고 털어놨다.

### "배신" 따가운 눈총

양심선언자들은 이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이 비법함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의 연장이었다고 강조한다.

이. 전중위는 "군 부재자투표 부정을 공개할 당시 기자회견의 명칭을 '양심선언'이라고 하지 않고 '증언'이라 한 것도 보고 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는 소박한 뜻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심선언자들은 한결같이 양심선언이라는 어휘가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사회의 민주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우선 당장 양심선언자들을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바람이다.

이들이 지난달 15일 시국선언이라는 또 한차례의 '양심선언'을 한 것도 이런 바람의 한 표현이다.

이 전감사관은 "외국의 경우 자신이 관련된 범법행위를 스스로 고발할 때 국가가 공소권을 자제하거나 형량을 크게 낮추는 것이 관례"라며 "사법권의 독립이 미약하거나 검찰권 행사가 편파적인 우리 현실에서는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을 통해 양심선언으로 얻어지는 공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권 기자>

## 부패한 세상의 외톨박이 - 양심선언자들

# 시국 물줄기 바꾼 '용기' 돌아온건 사법 '철퇴'

## 5공이후만 총49명...보호장치 마련 서둘러야

한준수 전 충남 연기군수의 관권개입 부정선거 폭로로 정국이 들끓던 지난 9월15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 서는, 다소 이색적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양심선언 공무원, 군인, 전경 시국선언"이라는 제목의 이 기자회견에는 이문옥 전감사관, 이지문 전중위, 양승균씨 등 18명이 참석해 △공무원, 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 △한 전군수의 석방 등을 촉구했다. 은폐된 공권력의 부정을 고발해 양심선언자라는 호칭을 얻은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심선언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 87년 양승균씨 '1호'

"뛰어난 도덕적 용기"라는 찬사와 "조직과 동료를 배반한 배신자"라는 비난을 동시에 받으며 평탄하지 않은 삶을 스스로 선택한 이들의 바람은 무엇이였을까. 그리고 이들은 그 꿈을 열매 맺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5공화국 이후 양심선언 1호로 기록된 사람은 전경의 신분으로 전경 해체, 경찰 민주화 등을 요구하는 양심선언문을 발표한 양승균(28)씨이다.

양씨는 경기도 과천 정부제2종합청사의 경비전경으로 복무하던 86년 1월 보사부의 명인 침술금지 결정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던 시각장애인들을 강제로 진압하며 "내가 왜 이들을 때릴어야 하나" 하는 심한 자책감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그뒤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 권인숙씨 성고문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87년 7월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에서 '독재에 고향'이라는 양심선언문을 발표하고 잠적한 뒤 전경해체투쟁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불잡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현재 윤석양후원사업회에서 사무국장으로서 일하며 군 민주화와 군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특별한 정치적 신념이나 거창한 운동목표가 있어서 양심선언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양심의 요구에는 충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반사회는 물론 군, 전경 내부에서 수십명의 양심선언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 14명 아직도 수배

양씨의 안타까움처럼 '부패'한 현실은 끊임없이 양심선언자들

양산해 왔다. 지난달 15일 시국선언을 한 양심선언 공무원, 군인 등이 집계한 5공회국 이후 현재까지의 양심선언자는 군인·전경 45명, 민간인 4명 등 모두 49명이다.

이들 가운데 28명이 양심의 증언을 한 대가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또 전경·군인 14명이 아직도 수배상태에서 길거리를 떠도는 실정이다.

이들 가운데는 이문옥, 윤석양, 이지문, 한준수씨, 등 시국의 물줄기를 바꿔놓고 정치·사회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굵직한 얼굴들이 쉽게 눈에 들어온다.

90년 5월 감사원 이문옥(55) 감사관은 당시 은행감독원이 12%로 발표했던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실제로는 재벌기업의 전체 보유토지 가운데 43.3%를 차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씨의 이런 공개로 재벌이 부동산투기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됐고, 정부는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씨는 정부의 '요직'에 있는 현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부의 비리를 공개한 것에 대해 "나를 공무원으로 임명해준 국민에 대

한 의무를 지킨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공무원은 정부를 위해 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소박한 신념에 투철했던 이씨는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비리고발센터 소장으로 각종 제보와 고발을 추적하는 '시민의 감사관'으로 활약하고 있다.

한겨레 92.10.1

한겨레 92.10.1

# 양심선언자 보호법 제정운동

## 4개 단체 내일 공청회 “비리 고발자 희생 막아야”

공과 경찰,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이 내부비리를 폭로한 양심선언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심선언자 관련단체와 범조직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양심선언자인 정경진(위원장 김종일), 나라사랑양심선언자모임(회장 한준수 전 연기군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이문옥 전 감사관) 등 네 단체는 오는 9일 오후 5시 서울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양심선언자 보호

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추진 운동에 나선다.

또 이들은 기존의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확대개편해 전국연합, 민가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등 다른 민주운동단체와 연대해 전국민적 차원의 국회입법청원 서명운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양심선언 관련단체에 따르면 지난 87년부터 지금까지 양심선언을 한 사람은 모두 46명이다. 이들은 모두 군무이탈이나 전경대

설치법 위반, 기밀누설 등 갖가지 죄목을 뒤집어쓰고 구속·수배되는 등 고초를 겪어온 했다. 더욱이 개인 회생을 감수하며 권력 내부의 부정비리를 고발한 양심선언자 보호문제는 아직까지 개인적 구명 운동 수준을 넘지 못한 상태다.

법안 기초의 실무를 맡고 있는 민변쪽은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이 조직의 부정부패와 비민주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려면 양심선언자보호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 형태로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법에 양심선언 내용 조사를 제3의 기관에 맡기고 양심선언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행위에 대해 따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등을 넣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민변의 백승현 변호사는 “미국 의 경우 부정고발법, 공무원제도 개혁법, 군내부고발자보호법 등 특별법과 국민의 알권리 및 저작권을 원용한 각종 판례들도 양심선언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전하고 “권력의 부패와 관료화의 폐해를 막으려면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94.5.8

양심선언자 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으로 부정비리의 추방을!

이 문옥 (전국불교운동연합 공동의장)

지금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부정비리를 추방하고, 깨끗하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흔히 부정비리를 추방하는 방법은 수사나 감사의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벌하는 방법과 부정비리를 미리 예방하는 조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정권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방법이 전자에 해당합니다. 4.19 혁명으로 들어선 민주당 정권, 5.16 군사쿠데타로 들어선 박정희 정권, 5.18 군사쿠데타로 들어선 전두환, 노태우 정권 모두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부정비리를 추방한다고 수사과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공직자 등을 처벌하고 부정비리의 추방에 큰 공이나 세운 듯이 이를 국민에게 홍보하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국민들은 그때마다 후한 점수를 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고질적인 부정비리는 추방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복해 있다가 더욱 지능화되고 대형화되어 오늘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수사나 감사가 표적 수사나 표적 감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고, 아울러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소홀히 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정비리 추방에 힘을 쓰는 이상으로 그 예방에 치중할 때가 된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제도적 방법으로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이라 함은 조직 내부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공익을 위협하는 부정비리의 실재를 보고 이를 국민 모두를 위하여 공개함으로써 부정비리를 추방하게 하고 어떤 불이익도 받지않고 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모든 국민들에게 어떤 부정비리도 반드시 공개되어 들통나고 말 것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어 누적된 고질적 부정비리의 추방뿐만 아니라 그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이 공청회가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의 계기가 되도록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5월 9일

# 공익위한 양심선언 보호 시급

## 내부 비리에 적극적 대항수단

### 87~92년 47명 명예회복 조치 필요

####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9월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양심선언자들의 명예회복과 함께 양심선언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이문옥 전 감사관, 한준수 전 연기군수, 이지문 전 중위, 심문고 양심선언 교사, 양심선언자들과 장기욱 의원, 백승현 변호사, 박홍식 중앙대 교수, 김석준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회민주화와 비리퇴진을 위해 개인적 손해를 감수한 양심선언자들의 사회·정치

들이 단한 불이익 조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윤석양 이병과 같이 양심선언 행위로 여전히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실정이다.

더 늦기 전에 이들에게 가해진 불이익 조치를 철회하고 형벌을 취소하는 일괄적인 명예회복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양심선언 행위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정해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권력이나 집단의 조직적인 비리·불법에 대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 박홍식 교수 = '내부고발'의 예시가 우리보다 20여년 앞선 미국의 경우 다양한 입법 장치를 통해 양심선언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정부 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 보호법' 공무원제도 개혁법, 민간

적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백승현 변호사 = 내부고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양심선언은 내인 대항수단이며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인 만큼 이들의 보호는 필수적이다.

지난 87년부터 92년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군인 20명, 전경 24명, 공무원 3명 등 모두 47명의 양심선언이 있었으며 이들 모두는 구속되거나 수배조처됐다(이들은 그 뒤 상감수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섰는데도 해직, 파면, 불명예 제대 등이



양심선언자 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9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양심선언자 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문옥 전 감사관과 한준수 전 연기군수 등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임원호 기자

부문에서의 '부정고발법' 등이 그 해 주는 것이다.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제정할 때 미국의 경우와 같이 비리 공개에 앞서 그 시정을 위해 최대한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자신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사람에 한해서만 보호한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부패 제거의 실천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런 내부 양심자들을 도덕적 의지를 뒷받침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작업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내부 고발자의 보호는 공무원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부담한 상관의 명령이 아닌 법과 윤리적 기준,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뒷받

한겨레 94. 5. 10

# 내부고발자 보호법 시급하다

## 감사활동 곳곳 한계...내부고발 비리 예방 큰 효과

인전직할시 복구청 소관 취득세 횡령 사건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감사기관들의 감사활동만으로는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일깨워 준 사례이다.

먼저 일선기관에 대한 감사는 감사의 주체가 어디에 따라 그 한계가 드러난다. 감사담당 부서가 감사할 대상부서와 같은 기관장 소속으로 있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 감사담당 공무원은 기관장과 특별히 가까운 공무원이 책임자로 있는 부서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부서 감사에 부패의 혐의가 있다면 기관장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도 감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며, 감사를 받는 부서의 책임자가 대개 그 기관의 상급자이므로 미래에 감사담당자의 직속상관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철저한 감사를 하지 않을 우려도 있다.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록 되어 있는 감사원 역시 대통령 직속기관이므로 대통령의 지위가 위태로울 정도의 대형 부정부패가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하기 어렵다.

다음은 표본감사에서 오는 한계이다. 감사담당자가 감사할 대상 기관이나 대상 업무, 대상 감사사항 등을 표본으로 선정할 때 무작위로 정하더라도 부정부패가 내재된 대상이 빠질 확률이 항상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실이나 내부부나 인전직할시 감사부서가 감사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인전직할시 복구청을 빼뜨릴 확률이 있다 할 것이다. 감사담당 공무원이 감사할 대상물 자의로 선정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문제점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독립성 결여에서 오는 한계이다. 부정부패를 회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권력의 실세나 혈연, 지연, 학

연 등으로 저명인사들의 로비를 받거나 사립당 공무원이 거절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 밖에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치적 격려가 할 수 있는 4.19령, 5.16군사쿠데타, 유신정권, 5.17군사쿠데타, 때마다 최고권력자들은 최상급의 처방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적절하겠다고 국민에게 다짐했지만 결과는 허무한 것이었다.

이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하여는 감사방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감사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어 부정부패 예방에 힘써야 한다.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로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 조직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예방하기 위하여 그 내부시정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부패의 실상을 고발하도록 하고, 법이 그 고발자를 보호



이 문 옥  
전 감사원 감사관